

## 251114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 1차 회의

박명호 위원장

01:46

예 그럼 바로 회의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의아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공동위원장인 주은선 교수님도 있는데 왜 제가 사회를 보느냐 의아하실 텐데 주은선 교수님하고 저희가 이제 돌아가면서 사회를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채카** 첫번째 회의는 제가 사회를 보기로 했구요, 다음 회의는 주은선 교수님께서 사회를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논의해야 될 것들이 좀 많습니다.

의사 결정 내려야 될 것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 결정 내리는 것 자체가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발제를 또 준비해 주신 분들도 있어서 먼저 오늘 회의는 발제와 토론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하여 의사 결정 내려야 할 것을 그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호 위원장

02:37

첫 발제는 두 분께서 해주실 텐데, 최근에 개정된 국민연금법에 대한 평가 및 개선 방안을 주제로 윤석명 박사님과 박나리 박사님, 두 분께서 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각각 25분씩 해 주시고 한 30분 정도 위원 간 토론회를 토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저희가 회의를 2시간 정도 안에서 끝내고자 하기 때문에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발제자 분들은 가급적 제안드린 시간을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22명이나 됩니다. 위원들이 그래서 한 분께서 너무 많은 발언 시간을 사용하다 보면, 다른 분들이 사용하실 시간이 없기때문에 최대한 핵심만 짚어서 간결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명호 위원장

03:36

그럼 박나리 박사님께서 먼저 발제하는 시간을 갖고, 윤석명 박사님께서 그

다음에 하시고, 이 주제에 대하여 논의한 다음에 우리가 의사결정을 내려야 될 것들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죄송합니다. 근데 위원들 인사도 안 하고 제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시작했는데 우리 위원장 우리 주은선 교수님 또 돌아가시면서 간단하게 소개하시지요

주은선 위원

04:10

네 방금 소개받은 주은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마음이 그런데 어쨌든 우리 논의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그리고 지금 필요한 논의를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04:36

안녕하십니까?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김도형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김원섭 위원

04:36

안녕하십니까? 고려대 사회학과 김원섭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박나리 위원

04:41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 학과에서 이번에 박사를 받은 박나리입니다.  
오늘 발제를 맡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박명호 위원장

04:49

발언을 하실 때 좀 마이크 가까이 되셔야지 잘 들릴 것 같습니다.

박철언 위원

04:54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행정학 박사 과정 하고있는 박철언입니다.  
청년 세대의 대표라고 하는데 대표까지는 아니고 목소리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명 위원

05:06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원 윤석명입니다.  
여기 명단 보니까 어제도 보니까 제가 최고령자인 것 같아요. 한 30년 동안  
계속 연금개혁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좀 제대로 된 어떤 청년세대가  
일을 했을 때 큰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합의를 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세은 위원

05:27

네 충남대학교 경제학과의 정세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정해식 위원

05:32

예 정해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보영 위원

05:37

네 안녕하세요. 신촌문화정치연구그룹에서 활동하는 정보영입니다.

유희원 위원

05:44

국민연금연구원에서 근무하는 유희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신승룡 위원

05:49

네 안녕하세요. KDI 신규연금 분리를 주장한 신승룡입니다.  
반갑습니다.

배관표 위원

05:58

예 안녕하세요. 충남대학교 국가정책대학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배관표라고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박종상 위원

06:03

안녕하세요.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박종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류재린 위원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류재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김학주 위원

06:15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김학주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김신영 위원

한양사이버대학교 김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김대영 위원

영등포에서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김대영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박명호 위원장

제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위원님들 소개도 못할 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그럼 박나리 박사님께서 먼저 25분 정도 발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나리 위원

06:39

네 오늘 발제는 우선 이제 3차 연금개혁을 좀 간략하게 평가를 해보고 최근  
이제 세대 간 불평등 문제와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려보고 향후 개혁 방안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차 연금개혁은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모수개혁을 중심으로 일부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해졌습니다.

이 중에서 모수개혁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재정안정성과 소득보장성을 모두 일정 정도 강화했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으나 지금 우리나라 국민연금 제도의 실질 가입 기간이 매우 짧은 것을 고려했을 때 조금 더 보장성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나리 위원

07:25

크레딧 확대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적 기여에 대한 가치를 조금 더 올려줬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출산 크레딧 같은 경우는 원래 그 제도의 도입 목적이 여성의 수급권 강화에 있는데 2024년을 기준으로 여전히 여성의 수급률은 2.2%에 불과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지급보장명문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금 점수를 높게 주고 싶은데요. 지금 최근 청년들의 이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팽배한 상황에서 이 지급보장의무를 명확히 한 것은 어쨌든 좀 신뢰 회복의 첫걸음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납부재개자를 대상으로 지역 가입자에게 이제 보험료를 지원하던 것에서 그것을 저소득 가입 대상으로 이제 확대를 했는데요.

박나리 위원

08:16

이제 예산안 소득 기준 100만 원을 기준으로 이제 이 예산안이 확정됐는데 기존 정부안이었던 한 80만 원보다 상향돼서 조금 의미는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여전히 임금 근로자와 비교했을 때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것을 불충분한 측면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외에도 아쉽게 다른 사각지대 해소 관련한 이제 노력들은 불충분해서 이것들은 이제 추후 보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현재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세대 간 형평성 혹은 향후 연금개혁의 방향을 좀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이 연금 제도의 목적을 다시 한 번 명확히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 제도의 도입 목적을 잊은 채 논의를 진행하면 그 올바른 결과로 이제 귀결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공적연금 제도의 목적은 소비 평탄화와 빈곤 완화를 통한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에 있습니다.

박나리 위원

09:15

우리나라 국민연금법 1조에도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라고 명확히 제시되어 있는데요.

2025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71.5%에 달하고 이 중에 58.5%는 국민연금 제도로 노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연금 제도는 사회 구원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엄밀하게 대리적이지 않더라도 노령이라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그렇기때문에 다양한 소득 재분배의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이제 모든 세대의 수익비가 1을 넘어가는 상황이라 그것을 이제 세대 간 재분배가 일어난다라고 우리는 논의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세대 간 불공평의 이제 이슈가 계속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 일부 정치인 혹은 언론을 토대로 강화된 혜택은 기성세대가 그리고 부담은 미래 세대의 몫이다라는 담론이 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나리 위원

10:21

그렇다면 실제 이 기성세대의 혜택이 커지고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제도 설계 자체는 높은 수익비 때문에 기성세대에게 유리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이 높은 수익비는 이번 개혁의 결과가 아니라 원래 초기에 제도 설계에 기인을 합니다. 그런데 이 높은 수익비에도 불구하고 이 숫자 이면에 있는 현실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초기세대는 상당히 높은 소득대체율에 심지어 99년까지는 보험료율이 3%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높은 수익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근데 실제 이제 가입 양태를 보시면 제도가 처음 도입된 88년도의 가입자 수는 444만 명이고 이것은 그 당시 총 인구 수 대비했을 때 17.9%에 달하는 가입률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전 국민연금으로 확대되었던 99년으로 가면 이제 가입률은 55.5% 정도로 여전히 불충분한 수준이 되었는데요.

박나리 위원

11:28

이러한 가입 양태를 고려했을 때 낮은 가입률은 현재 현세대 노인의 무연금 저연금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세대 노인은 이 높은 수익비라는 것을 토대로 얻은 연금액이 고작 65만 7천 원에 불과하고 이것은 생계급여 기준선에도 채 도달하지 않는 수준입니다.

그 결과 또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여전히 OECD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차세대 노인인 기성세대는 어떨까요?

다수 연구에서는 이 기성세대의 국민연금 불충분성 문제가 충분히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OECD가 격년으로 이제 제출하고 있는 보고서에 따르면 GDP 대비 급여 지출 수준이 제3차 개혁 이전에 2025년을 기준으로 2%였던 것이 35년이 되면 3.2%로 이제 증가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인 인구 증가분에 이제 불과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차세대 노인 역시도 실제 이 국민연금 불충분성 문제를 해소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나리 위원

12:37

그렇다면 과연 미래세대는 더 부담하는가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보험료율이 실제 올랐기 때문에 더 부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저와 같은 청년 혹은 그 미래세대는 기대 수명의 증가할 것을 좀 고려해 봤을 때 향후 연금을 받게 되는 이제 총 기간이 더 길어질 것이고 그렇다는 말은 이제 총 연금 자산 측면에서는 기존 현재 기성세대보다 더 많이 받게 됨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과연 비형평한가라고는 완전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또 국제적 관점에서 비교했을 때 이 13%라는 보험료율은 그다지 높은 수준이 아니며 또 이전 세대에 비해 현 세대가 생산성 증가했던 것을 고려했을 때 감당 불가능한 수준도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나리 위원

13:29

즉 청년이라는 개별 코호트 관점에서 이 보험료를 올리는 것이 우리의 이제 기대 수량 증가를 고려했을 때 그렇게 형평에 어긋난다라고 보이지 않으며 또 이제 소득대체율도 어쨌든 다소 인상되었기 때문에 연금액의 보장성도 일부

강화된 측면이 있어서 과연 이게 비형평한가라는 것은 단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국민연금 적립금을 보시면 지금 이제 현재 기준으로는 한 1,500조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이 중에 절반에 가까운 돈은 기금운용 수익금에서 나왔습니다. 이 말은 기성세대가 이미 납부한 보험료 덕에 부양 부담이 일부 완화됐다라고 이제 시각의 전환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나리 위원

14:16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정리를 해보면 초기세대의 수익비가 매우 높은 것은 맞지만 이제 낮은 가입률 때문에 실제 혜택은 크게 작다라는 것과 이것이 이제 향후 크게 개선되기 어렵다라는 점이 있고 또 인상된 보험료율로 청년들의 부담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대 수명 증가를 고려했을 때 그것이 비형평이라고 완전히 단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기금 수입금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세대의 부양 부담을 일부 완화한 것도 이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국민연금 제도로부터 어떠한 막대한 이익을 보는 세대도 또 막대한 이익을 보는 세대도 없는 것 같습니다.

즉 세대 간 불공평, 세대 간 착취는 실체가 없는 발언이며 일부 언론과 일부 정치인의 저는 무책임한 발언이 아닌가라고 좀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박나리 위원

15:09

그렇다면 왜 청년들은 불안해하는가라는 걸 고민해 봤을 때 저는 근본적으로는 현재 노동시장 상황과 경제 성장률 같은 것들이 청년들에게 굉장히 우호적이지 못한 환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은 당장 현생을 좀 살아가기도 벅차고 그런 상황에서 복잡한 연금제도를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언론의 자극적인 이야기들에만 노출된 결과다. 일부분은 오해에 기인한 것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해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 이제 앞으로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년들은 근본적으로 기금 소진 이후 내가 과연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높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박나리 위원

15:57

기금이 소진되어 버리면 내가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이제 불안 관련해서는 최근 3차 개혁으로 지급보장 의무 조항이 생겼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것들로 일부 해소할 수 있고 당장은 아니지만 인구구조가 어느 정도 안정화됐을 때 부과방식으로 이제 바뀔 수 있고 실제 독일이나 프랑스 등은 부과방식으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건강보험 역시도 부과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들이 이제 충분히 공유된다면 청년들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내가 연금을 받기 전에 기금이 소진되면 나의 보험료가 잔뜩 오를 것이라라는 불안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것을 부과방식비용률에 대한 공포라고 명명해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부과대상 소득이 상수 값인가라는 것을 고민해 봤을 때 노동의 방식이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돈을 버는 방식이 노동소득뿐만 아니라 자본소득으로 이제 많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박나리 위원

17:02

이러한 상황에서 이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을 계속 임금소득에만 부과하는 것이 맞는지 여기서부터 좀 논의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과방식비용률이 2080년대 가면 30% 중반까지 오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금이 소진되기 이전에 국고를 전혀 투입하지도 않고 보험료율을 전혀 인상하지도 않는, 즉 정부와 국회가 이러한 국민연금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방기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보험료율로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이게 과연 저는 정부와 국회의 역할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부과방식비용률을 너무 강조하는 것은 굉장히 건설적이지 못하고 연금제도에 대한 장벽이 되어서 청년들을 공포스럽게 만들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좀 사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나리 위원

17:57

그렇다면 이 미래의 추계 값 중에 과연 상수값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봤을 때 GDP 대비 급여지출 수준 정도는 상수값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2080년대 중반이 돼서 되어서야 이제 9.4% 정도로 올라갈 것으로 추계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최대 9.4%의 지출이 감당 불가능한 수준인가라는 걸 봤을 때 이 OECD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에 이미 OECD 국가들은 평균 9.5%를 GDP 대비 급여 지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것이 전혀 감당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청년들은 이 인구구조 변화와 부양비 증가에 대한 불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노인 부양비와 제도 부양비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박나리 위원

18:51

사실 공적연금과 관련해서 이 수치들은 기금 소진 이후에 문제가 될 텐데 사실 3차 개혁을 통해서 예산 기금 소진 시점이 71년도까지 연장되었고 사실 평균적으로 이 기금운용 수익을 해왔던 것처럼 기금운용 수익률을 6% 정도로 가정했을 때 이것은 최대 50년까지 연장이 될 수 있어서 사실 국민연금에 관해서는 제도 부양비를 대비할 여력이 좀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서 과연 이 노인 부양비와 제도 부양비가 고정 불변된 숫자인가라는 것을 고민해 봤을 때 이 2015년 이래로 65세에서 79세의 노인 고용률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우리가 노인 연령 인구기준을 지금처럼 잡을지 이것을 더 상향할 가능성은 없는지 그렇게 된다면 가입자 상한 연령이나 수급 개시 연령을 더 늦출 수 있지는 않을지 좀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노인 부양비나 제도 부양비는 이제 일정 정도 떨어질 수도 있는 숫자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박나리 위원

20:00

그렇다면 이제 변하지 않은 진실을 좀 더 우리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노인 인구는 더 증가하게 되어 있으며 모든 세대가 누구나 다 언젠가는 노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후에 대비한 소득 상실의 위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데요.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필요한 금액은 사실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소득 구성을 할지에 차이가 있을 뿐인데요.

2023년 국민 노후 패널 조사에 따르면 이 노후에 필요한 적정 소득은 192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제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만약 이 노후소득에서 국민연금의 비중이 작아지게 된다면 사적연금 저축 사적 부양을 통해서 이것을 별충하거나 혹은 그걸로 대비가 안 되어 있을 경우에는 계속 노동소득을 통해 노후소득을 확보해야 되며 그렇지 못한 이제 완전히 기능이 상실된 경우에는 기초연금 혹은 생계급여의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박나리 위원

21:07

즉 어쨌든 국가 재정이 어느 정도 투입이 되어야 되는 것은 사실이고 이것이 뭐 세금으로 나가든 아니면 연금기금으로 연금재정에서 나오든 그 출처가 좀 달라진다고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노령이라는 사회적 위험은 굉장히 긴 시간에 걸쳐 나타나기 때문에 기대수명이 연장되는 것에 대한 위험이 있을 수 있고 또 물가가 빠르게 올라서 그 실질 가치를 보완해 주지 못한다는 불확실성에 언제나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연금 제도는 사회적 계약을 통해 이러한 불확실성에 가장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노후소득 중에서 국민연금이 가장 큰 비중으로 이제 국민들에게 좀 어느 정도 노후 소득을 보장해 줄지 확신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청년기 불안정성인데요. 청년들은 굉장히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안정된 기회를 붙잡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데요.

박나리 위원

22:11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정된 노후를 지금 걱정하기에는 삶이 굉장히 각박합니다. 이 아래 보시면 청년들의 월평균 소득은 218만 원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 돈으로 주거비, 생활비 그리고 결혼 자금을 모아야 하기도 하고 이 돈으로 노후도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국민연금이 없다면 이 정도 금액을 가지고 이제 확실한 노후소득을 대비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플 때 병원에 가서 본인 부담금만 내고 진료를 받고 실업

상황에서는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것처럼 국민연금을 통해 일정 수준의 연금액을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한다면 저는 청년들이 국민연금 제도를 신뢰하고 또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언젠가는 노인이 되기 때문에 노후를 준비해야 하고 신뢰가 확보된다면 또 국민연금처럼 노후를 대비하는 데 확실한 방안은 없기 때문입니다.

박나리 위원

23:13

그렇다면 이러한 확신을 주기 위해서는 이제 일정 수준의 연금액에 대한 수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고 또 어떻게 죽을 때까지 줄 것인지에 대한 방식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사실 지금까지 이제 개혁 논의의 흐름과 크게 맞닿아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우선 수준에 대한 합의와 관련해서는 기존 소득보장 관련 논의로도 볼 수 있고 월드뱅크나 이제 IMF 같은 경우는 실질소득대체율의 40%를 최저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국민연금은 이제 3차 개혁을 통해 명목소득대체율을 약간 인상한 부분은 있지만 가입기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20% 중반으로 낮아진 실질 소득대체율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방식에 대한 합의 관련해서는 이제 재정안정 관련 이제 논의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이 소득보장 관련된 논의와 달리 좀 합의된 기준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박나리 위원

24:12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건강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급여를 삭감해야 한다 기여를 인상해야 한다라는 수지균형에 조금 더 매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정안정과 관련해서는 빨리 그 기준에 대한 합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 재정안정성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좀 찾아보고자 그 학자들의 개념과 또 우리 국민연금법에 있는 4조에 장기재정균형 유지에 관한 조항을 첨부해 두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장기재정균형이란 재정적 능력으로 조금 감당 가능해야 하고 재정 건전적으로 좀 지속 가능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가 현재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가 과연 기금의 영구화인지 연금제도의 완벽한 수지균형인지에 대한 합의를 하지 않은 채 이것을 어떻게 재정 안정화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수단들이 계속 논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나리 위원

25:15

지금까지 이 재정안정성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시된 것은 세대별 차등 보험료율 인상, 자동조정장치, 퇴직연금 의무화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신연금 체계로 전환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등 보험료율 인상 같은 경우에는 우선 세대기준에 대한 모호성이 있고 또 고연령의 저소득자와 저연령의 고소득자 간의 역진성 문제가 초래될 수 있어서 또 다른 이제 세대 간 비형평의 문제를 낳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동조정장치 같은 경우에는 사실 OECD는 반드시 필요한 변화와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변화를 구분하고 조심히 제도 조정을 해야 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한국의 연금액이 과연 이 나라만큼 높은가라는 것을 봤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아래 그래프를 통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나리 위원

26:11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자동조정장치를 논의하기에는 굉장히 시기상조인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퇴직연금 의무와 같은 경우는 이제 보충적으로 더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도 사각지대 문제가 굉장히 크게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퇴직연금의 역할이 어느 정도로 설정될지는 보충적인 것 이외에 근본적으로 뭔가를 변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듭니다.

신연금 체계로 전환 같은 경우에는 현재 DB형 방식을 DC형 방식으로 전환하자라는 의미 같은데 이렇게 될 경우 현재 청년세대는 자신의 수급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신의 기여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현세대 노인들의 수급액을 이제 충당하기 위해 또 다른 지출을 해야 하는 등 이중 부담의 문제가 생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것을 좀 더 신중하게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대안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박나리 위원

27:14

저는 이렇게 수단이 계속 논의되는 게 목표가 없는 재정안정화를 계속 논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저연금 혹은 무연금에 대한 청년들의 불신은 사그라들지 않고 그 결과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고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하며 모두에게 상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장기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은 이 장기재정균형을 어떻게 목표를 설정할지 그것을 이제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한 이제 향후 개혁 방향은 이번에 이제 새로 개정된 조문에 반영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서 예컨대 인구 구조가 안정화될 때까지 기금을 유지한다라는 식으로 목표를 좀 설정하고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수준의 국고를 투입하는 등 이런 건설적인 방향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나리 위원

28:21

그리고 그에 앞서 노동시장을 좀 개선하고 출생률을 반등시키는 등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방안을 우리가 강구해야 국민연금 제도뿐만 아니라 고령화 사회에서 다른 사회보장 제도에도 이제 긍정적인 함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향후 연금개혁의 방향 논의를 조금 위해서 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5년마다 장기재정추계를 하는 것처럼 국민들 모두 내가 실제 노후에 어느 정도 보장성을 받을 수 있을지 그 수준을 예측할 수 있도록 보장성에 대한 장기추계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실질적인 보장성 강화를 위한 이제 여러 논의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 현재 우리 실질 가입 기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아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한다든지 혹은 뭐 크레딧 제도를 더 강화해서 그 가입 기간을 보충해 주려는 노력 혹은 이제 이런저런 이제 논의들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나리 위원

29:25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모두가 이 기여한 몫보다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다단계 사기도 폰지 사기도 아닌 국민연금 제도가 세대 간 연대에 기반하여 설계된 DB 방식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계속 수지균형의 잣대로만 이 국민연금 제도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면서 그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좀 지양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1인당 GDP 3만6624달러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후 빈곤을 걱정해야 하는 이 모순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은 어쨌든 미우나 고우나 핵심 노후 준비 방법으로 국민연금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퇴는 제 인생 2막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적정 수준의 노후소득이 없는 은퇴는 지옥이 이제 지옥일 수밖에 없습니다.

박나리 위원

30:28

그렇기 때문에 자동안정화장치 등 급여수준 인하는 당장의 이제 부담 수준을 줄여줄 수는 있겠으나 우리의 노후를 앗아가는 조치라고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적정 수준의 노후 소득을 통해 안녕한 삶을 누릴 수 있길 바라며 이제 오늘 발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호 위원장

30:54

시간 잘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석명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윤석명 위원

31:00

지금 시간이 10시 33분인 것 같습니다. 11시쯤 이제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다 보니까 제가 이제 위원 중에서 최고령자인데 이제 발제를 맡게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30년 동안 연금 개편 운동에 참여해 왔고 97년 IMF 경제위기 때 우리 총리실 산하의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 사무국에서 옵저버(Obsever) 자격으로 참석한 이후 대한민국에서 논의된 대부분의 연금개혁 논의에는 거의 다 참석을 한 것 같습니다. 오래 해 왔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많이 본 것 같아요. 시대 변화에 따라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느낄 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대학 다닐 때 아주 인기 유행가 중에 하나가 변진섭의 희망사항이라는 게 있었어요.

윤석명 위원

31:48

근데 우리가 연금제도가 노후소득보장제도를 우리가 원하는 희망 사항을 모두 관철시키기는 어렵지 않느냐 우리가 어떤 지난 88년 제도 도입 당시와 비교했을 때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나 우리 현실을 직시하면서 그중에서 국민연금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노후소득 보장 제도를 통해서 추구할 가치가 한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윤석명 위원

32:10

이 제도가 도입됐으니 대한민국 국민들 대다수는 이 제도에 가입할 수 있어야 되고 또다른 하나는 연금제도가 도입이 됐다고 그러면 노후에 안정적으로 먹고 살 만큼의 연금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어떤 정책적인 요구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요새 이제 논의가 많이 되는 건 이 제도가 한 특정 세대의 파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세대가 그 가치를 핵심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서스테인어빌리티 그러니까 지속가능성을 공유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좀 세 가지가 주된 이슈 같은데 어떤 이념적인 생각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또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정책 목표 중에서 하나만 강조하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제가 변진섭의 희망사항을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하나의 제도로 보험료도 안 내는데 어떻게 먹고 살 만큼의 연금을 줄 수 있겠습니까?

윤석명 위원

32:58

보험료도 안 내는데 먹고 살 만큼의 연금을 주면서 어떻게 그게 후세대 부담을 안 줄 수 있겠습니까?

이건 우리가 현실에 가지고 있는 컨스트레인트(Constraint), 즉 제약이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 모든 생각들은 현실을 딛고 바로 설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것부터 좀 강조를 하고 싶고요.

(제 발표 자료.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요?) 저는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거북한 말씀을 처음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자료가 아직 화면에 뜨지 않고 있으니까 그러는 데 배포된) 제 요약의 일단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2025년 3월 20일에 통과된 국민연금법 개정 내용은 이걸 한 문자로 요약한다면 이거는 개혁을 가장한 개악이다.

좀 더 자극적으로 표현하자면 대국민 사기극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윤석명 위원

33:43

그렇지 않아도 지속이 불가능한 제도 지속 가능하게 개혁 논의를 하라고 그랬더니 안 그래도 상당한 기득권을 갖고 있는 50대 이상 연령층들이 기득권을 더 공고히 하는 그런 식으로 제도 개편을 해놓고, 종이 쪼가리 한장에 불과한 지급보장 제도를 도입했으니 당신들도 연금을 받을 수 있어! 걱정도 팔자야! 태산이 무너지냐? 이런 논리를 펴고 있거든요.

근데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는 건 뭐냐 하면 중요한 건 우리는 연금 지표를 봐야 된다는 거죠.

연금제도를 개편하기 전에 부과방식보험료가 최대 36%가 넘어갔어요.

앞 부분으로 가야 할텐데! 이게 좀 크게! 아! (스크린에 비쳐진 발표 자료가) 전혀 안보네요! 음! 전혀 안보이네요!

이제 제가 어디를 말하고 있다는 것만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우리는 화면을 보면 우리가 지속이 가능하게 하려고 재정계산도 5년마다 하고, 그래서 제도 변경도 하지 않았습니까?

윤석명 위원

34:36

그 지속이 불가능하다는 제도, 소득대체율 40%-보험료 9% 짜리의 부과방식 최대 보험료가 36%가 넘었어요.

그런데 28년만에, 2007년 이후에 3차 연금개혁이라고 우리가 자화자찬을 많이들 하고 있는데 그 제도 개혁의 핵심은 기금이 다 소진된 이후에 부과방식보험료가 39%가 넘어간다는 거고 또 요새 굉장히 화두잖아요. 연금개혁 논의는 뒷전에 가 있고 정년 연장을 65세까지 양대 노총에서 이거 우선적으로 해달라고 그래서 여당 대표도 가서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만약에 정년연장이든 아니면 퇴직 후 재고용이든 5년 일을 더 하게 되면 의무납입연령이 지금 59세까지거든요. 의무납입연령이 뭐라는 게 뭐냐면 자기가 보험료 9%라고 그러면 지금 4.5% 절반은 사용자가 내주는 거예요.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걸 여태까지 우리는 59세로 묶어놨거든요.

윤석명 위원

35:30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2023년 5차 재정계산 또 21대 국회 연금특위에서 재정계산하면서 가정했던 게 뭐냐 하면 2093년 또는 2095년에 당시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 수명이 90세 또는 91세라고 가정하고 있는데 앞으로 70년 뒤에도 우리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59세까지만 사용자가 50%를 절반 부담해 주겠다 이 말도 안 되는 가정을 해놓고 모든 추계를 하고 70년 후에 아! 이렇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어쨌든 이번에 개혁을 해서 부과방식 공식 보험료가 39%가 넘게 올라갔는데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민주당도 그렇고 양대 노총이 압박을 하니까 10년 내로는 의무 납입 연령이 5년 연장돼서 64세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부과방식보험료가 41%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윤석명 위원

36:22

근데 이게 우리 연금이 직면한 문제인데, 어제도 보니까 우리 민주당에서는 구조개혁 논의를 한다고 한 게 뭐냐 하면, 자산에다가 세금을 뺏아내서 국고 투입하고, 그 다음에 퓨쳐펀드 만들고 하면 기금 고갈을 걱정할 거 없다고 그러는데, 왜? 앵한 남의 재산을 탐내니까?

이건 연금제도라는 건 자기가 기여를 해서 연금을 받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릴 요지는 뭐냐 하면 연금 제도는 연금 제도 그 자체로 봐야지! 왜? 연금제도 하나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를 국민연금 제도 하나로 다 해결하겠다 이런 그 어떤 사고방식의 출발 자체를 저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저 요약 부분의 앞 부분을 보면 부과방식보험료가 41.2%에 달하고, 이 누적적자는 제가 국회 특위나 재정계산위원회에서 그렇게도 쓰자고 그랬더니 그때 많은 위원분들이 그러더라구요!

윤석명 위원

37:15

누적적자나 미적립부채는 윤석명 혼자만 쓰는 개념이니까 위원회에서 못 쓰겠다고 그랬는데, 웬걸! 위원회가 끝나고 나서 국회 특위 국회의원 분들이 논의할 때는 누적적자 개념을 썼었고 미적립부채도 21대 국회 종료 시점에 김진표 국회의장한테 복지부가 보고를 했어요.

1,700조 원이라고 그리고 최근에는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1,820조라고 미적립부채 발표를 했던 말이에요.

근데 일단 공식적으로 쓰니까 이걸 윤석명 혼자만 쓰는 개념이 아닙니다. 누적 적자가 여기, 저기를 보면, 8쪽을 보세요! 그냥 이 제도를 그대로 놔 두었을 때 누적적자가 2경 1,600 몇 조예요! 2경 2천조가 안 됩니다. 근데 이번에 개악한 거의 실체는 뭐냐 하면 2경 1600조 원에서, (이 금액에 추가하여) 179조원이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의무납입연령을 5년 더 연장하면! 이게 개혁이냐? 제가 지표를 봐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 이게 개혁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제가 여기도 써놨어요.

윤석명 위원

38:18

제 말씀 끝난 뒤에 손 들고 저한테 질문하시라고! 밤새워 토론할 준비가 돼있고요!

(순서가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앞에 내용으로 다시 가서 요약 부분을 먼저 해야 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뒤에 있는 게 뭐냐 하면 그동안 특위 (자문위원회) 회의를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여태까지는 안 했거든요.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특위 기간을) 연장하는 건 기정사실화 한다니까 제가 그런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발표 화면을) 요약 부분 두번째 페이지로 보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팩트를 보여드렸듯이 이걸 개혁이 아니라 개악입니다.

근데 우리는 왜 이걸 다 개혁이라고 알고 있을까요?

정치인과 언론이 개혁이라고 다 보도를 하니까 개혁이라고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제 경험상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회의하는 순간 실시간으로 언론과 국민한테 알려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회의를 유튜브 동영상으로 생중계 하자! 그리고 여기 녹취를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윤석명 위원

39:08

녹취록으로 상세 회의록을 작성해서 일단 정확하지가 않더라도 회의 끝나고 하루 내 즉시 자문위원과 언론에 공개하는 쪽으로 하자.

저는 이렇게 추진하고 싶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언제부터인가 21대 국회에서 이게 변질이 됐어요. 왜 공동위원장 두 분만 가끔 가다가 국회 연금특위 의원 분들하고 회의를 합니까?

제가 경험이 많다는 게 좋은 게 뭐냐 하면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다 아니까! 2015년 논란이 됐었던 공무원연금 개편 때, 또 거기서 사고를 쳐 가지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까지 올리라고 합의를 해버렸어요!

공무원연금 개혁하라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두 분이, 잘 알려지신 쌍김 두 분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것에 대해) 합의한다는 결론을 내버렸어요! (이런 합의가) 수습이 안 되니까 만들어진 게 공적연금강화 및 노후빈곤해소 위원회였습니다.

그 때 두 (위원회) 다 국회 위원회의 국회의원님들하고 여기 계신 자문위원분들이 같이 합동회의를 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윤석명 위원

40:04

우리가 여기서 회의하는 걸 상세 회의록으로 작성한다고 그러면 그건 어떤 상징적인 의미만 있지 어떤 법적인 구속력은 없을 것 같은데 국회 특위 소속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회의를 한다고 그러면 국회 속기록이 다 작성이 됩니다. 여기 속기사 없지 않습니까? 속기록이 작성된다는 건 뭐냐하면 우리가 하는 회의 내용들이 국회를 통해서 영원히 기록이 돼서, 과연 지금 (발표 자료 내용을 보여주는 스크린 화면) 저 앞에서 앞에 한 분이 발제를 하셨지만 어떤 분들의 입장이 진정 공적연금 강화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입장이나 또 어떤 분들의 입장이 진정 세대 간 상생을 통한 세대 화합의 입장인가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수 있고 후세대에게 남겨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발표에 자신이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이게 제 입장입니다. 한 15분 남은 것 같으니까 이제 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발제 목차가 이렇게 있고요.

윤석명 위원

40:56

시간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요약이 아닌 본문의) 1쪽을 보면, 상세 내용은 읽어보시는데, 1쪽에 보면 국민연금법 개정 이전 논의 절차 과정에서 치명적인 문제점들 저는 이걸 많이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등을 포함해서 국회의원 많은분들이 국회 본관 앞에서 피켓 시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언론을 굉장히 많이 압박했거든요. 그때 이분들이 했었던 이야기가 뭐냐하면 위대한 시민대표단들의 결정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라고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저의 그런 내용이 1쪽에 있습니다. 이 경우 역시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걸 제가 NATV(국회방송) 정관용의 정책토론 생방송에서 지적을 했을 때도, 또 사실이 아니라고 그랬던 분이 국회 연금특위의 21대 국회 여당 간사였던 유경준 의원이 지적이 했을 때는 그 자료가 중요한 것 같지 않아서! (화면에 나타난 설명 자료가 잘 못 넘어감) 아니 1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삭제를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생방송에서 거짓말한 셈입니다.

윤석명 위원

41:55

이 내용이 뭐냐 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민대표단 500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500명의 모집단인 1만명에 연금을 더 주자는 사람들을 더 많이 추인(포함)했다는 거예요. 이걸 밝혀진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복지부가 여기, 이 자리에 참관하고 계시지만 굉장히 중요한 자료를 제공했어요.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고 보험료를 13%까지 올릴 경우에는 부과방식보험료가 최대 43.2%까지 올라간다.

그 내용을 복지부가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 학습자료를 제출했는데, 그걸 양 공동위원장이 포함돼서 의미 없다고 삭제를 해버리고 자료를 만든거예요!

이건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하셨던 3선 의원인 김세연 의원의 표현에 의하면 “거의 범죄 수준에 가까운 행위“라는 겁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범죄 수준에 가까운 행위“라는 건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법을 잘 아는 분의 말씀입니다.

윤석명 위원

42:49

그때놓고서는 이게 위대한 시민의 결정이라고 모든 언론이나 우리 힘을 갖고 있는 집단들에서, 매번 국민의 뜻을 따르라 그랬거든요! 결정된 과정이나 그걸 주장하는 집단이나 도덕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는) 그 표가, (스크린 화면에 나오는) 이걸 삭제해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43.2%까지 올라간다는 거야. 아니 이거 젊은 층들이 안다고 그러면 동의하겠습니까?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제가 저 같은 경우에는 발제를 하는데, 이게 제가 또 호도하나 싶어 갖고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구글에 물어봤어요.

구글 AI 요새 AI 열풍이지 않습니까? 한국 종합주가지수에 대해서도 AI에게 많이 물어봤는데 구글에 물어봤더니 지금 제가 얘기하는 입장하고 청년층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발제 내용이 너무도) 뽀뽀하니까! 한 1분만 우리 동영상 시청하고 가시죠! 1분만 틀어주시겠어요. (스크린 화면에 나타난 동영상인 캡처 화면인 “우리가 가만히 있으니 가마니인줄 아나?를 가리키며) 이거!

윤석명 위원

43:41

제 이야기가 아닌 젊은층의 입장입니다!

윤석명 위원

43:49

이 동영상은 뭐냐하면? (발제 자료에 수록된) “청년세대 목소리 1“입니다.

(발표 자료 스크린 화면에 나타난 동영상 제목인) “청년세대가 가만히 있으니 가마니인 줄 아십니까?“ (발표 스크린 화면 작동이) 왜? 안 됩니까? (발표할)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두번째 틀어 주세요! 그러니까 (동영상 작동이 되도록 조치를) 하실 동안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연금연구회 리더인데 7월 16일 동국대에서 8차 세미나를 개최했을 때 이 청년층 목소리 먼저 읽겠습니다. 학보사 기자인 전태영 영남대 학생은

“미래세대가 살아갈 사회를 기성세대가 결정하는 것이 아이러니” 하다. 박준영

경희대 대학생은 “기성세대는 겨우 몇 년 조금 더 내는 게 아쉬워서 아들딸, 손자 손녀를 40년 동안 국가의 ATM기로 만들어 놓고서 박수를 친다.”

학보사 기자인 오승리 동국대 학생은 청년세대는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적 계약을 요구한다.”

윤석명 위원

44:48

그리고 예술가로 활동 중인 양경아 씨는 “이제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편과 ‘넌 만큼 돌려받는’ 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이게 청년층 목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동영상 화면이) 나올 때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5쪽에 왜? 청년세대들은 분노하나? 이걸 뭐냐면? 이게 뭐! 청년층이 별 불만이 없다고 그러는데, 소득대체율은 43%로 3-4% 포인트 올리면 그것도 즉시 올리는 거예요. 이게 3% 포인트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월급으로 따지면 7.5%를 올리는 겁니다. 내년 당장 7.5%를 올리는 반면에 보험료는 내년부터 8년에 걸쳐서 4% 포인트를 올리거든요.

예를 들면 57-58세인 분들은 내년부터 당장 소득대체율이 7.5%가 올라갑니다. 퍼센티지로요! 그런데 (보험료율) 13%까지는 가지도 않고 그냥 “빠이빠이” 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청년층들이 이게 뭐냐고 분노를 하는 거죠.

윤석명 위원

45:44

그다음에 이제 세대 간 형평성 악화라는 건 뭐냐 하면, 음! 이게 뭐! 재정건전성 어찌고저찌고 이런 말들을 쓰는 데는 많이 하시는데, 25세 청년층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5세 청년층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40년 뒤, 지금 자꾸 왜?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국민연금법에 따라서 5년마다 국민연금 건강 상태를 점검해서 문제가 있으면 제대로 고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처럼 지난 2023년부터 지금 2025년까지! (계속 작동이 안되던 발제자료에 첨부된 동영상 화면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 광고 조금 지날 때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할) 시간이 없으니까! 이번처럼 공식적으로 전문가들이 합의해서 내놓은 재정추계 결과를, 수시로! 때도 없이! 혼드는 건 처음 봤습니다.

왜? (동영상의) 음이 안 나오죠? (동영상 한 번 보여주기가) 어렵네! 이번처럼

공식적인 재정추계 결과를

동영상 음성

46:39

(동영상에 나오는 발언자 음성) 가마니로 보이십니까?

윤석명 위원

46:41

처음부터 다시 좀 해 주세요!

동영상 음성

46:42

14일에 발표된 국민연금 모수개혁 청년세대는 들러리가 아니다.

구조개혁 없는 연금개혁 강력히 규탄한다. 이것이 개혁입니까?

청년세대가 가만히 있으니까 가마니로 보이십니까?

14일에 발표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은 근본적인 연금개혁이 아닌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연금의 구조개혁 없이 선심 쓰듯 일부 수치 조작에 그쳐 놓고 연금개혁이 시작되었다고 포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세대 간 공정을 외치는 청년연대미래생각은 깊은 분노와 우려를 표합니다.

이번 모수개혁을 하고 나면 또 구조개혁은 안 할 게 뻔합니다.

여야가 합의한 연금개혁안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9%에서 13%, 받는 돈인 소득 대체율은 40%에서 43%로 인상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더 내고 더 받자는 합의입니다.

윤석명 위원

47:54

저기서 이제 1분만 제가 물어달라고 그러는 건 뭐냐 하면 여기 나오는 말이 있어요. “이거 개혁했다고 해서 이제 구조개혁 안할 거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저희 청년세대들이 정확하게 예측을 하셨어요. 뭐! 이렇게 사각지대 해소하겠다고 보험료 지원하는 걸, 그걸 어디서는 구조개혁이라고 하고 있는데!, 제가 너무도 어이가 없어서 저 동영상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접할 수 있는 청년세대들은 이렇게 분노하며 들끓는데 왜 세대 간 갈등이 없다고 그러는지 저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동영상이 나오기 전 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을, 그 목적을 말씀드리면, 뭐냐 하면? 25세 연령층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까 혼든다고 그랬잖아요! 재정추계 결과예요! 공식적으로 국민연금법에 근거한 재정추계 결과는 2055년에 기금이 소진됩니다. 그런데 복지부가 가정을 바꿔서 (기금 소진 시점을) 2056년으로 바꿔놨어요. 거기에 근거해 가지고 지금 나오는 게 64년에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는 거거든요!

윤석명 위원

48:44

누구 마음대로 기금운용 수익을 5.5%로 올려 가지고 그게 70년, 71년으로 연장된다. 90년까지 연장된다. 이건 완전히 옛장수, 그런 옛장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2천, 아니 25세 기준으로 우리가 본다면 그러면 이번에 보험료를 올리면 공식적인 재정추계 결과에 따르면, 4.5% 수익률에 따르면, 64년에 기금이 소진이 됩니다. 그러면 25세 연령층은 40년 보험료만 딱 내고 나서, 그 시점에 가면 기금이 없는거예요!

물론 기금이 없어도 1-2년 연금 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양반들이 내는 보험료가 9%에서 13%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재정안정 착시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그걸 모르핀 효과라고 그러니다만! 그걸 갖다가 재정안정이라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굉장히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발제 자료 본문의) 6쪽으로 넘어가면! 이거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 있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좀 (발표 스크린 화면에)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와다나베 유이치라는 일본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윤석명 위원

49:41

뭐냐하면 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는 제도 개편 이후에! 뭐죠? 제도 개편 이후에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발제 자료의) 37쪽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과방식보험료가 36.2%에서 39.2%로 올라가고, 현행 제도에서 수지균형보험료가 19.7%에서 21.2%로 바뀌고, 현행 즉 개편 이전의 제도 대비 누적 수지적자는 6천973조원이 줄어든다고 그러는데! 이게 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적수지 적자 7천조 원을 줄여주는 중요한 가정 중의 하나가, 비교하는 제도 하나는 기금 투자 수익률을 4.5%로 해놓고, 이후 바뀐 제도는 5.5%를 해 놓은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이 양반(일본 정부 기관 소속)이 저! 한국에

와서 제가 조선폰에서 3시간을 설명을 해줬습니다. 제가 좀 과하게 표현을 하자면 연금제도를 주관하는 보건복지부가 이런 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면서 “국제적으로 엄청난 망신을 당했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명 위원

50:38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신규 제도를 비교할 때는 4.5% 또는 5.5%의 2개의 같은 수치를 가지고 비교를 해야 되고요. 또 일본 전문가도 그 부분에 동의했습니다. 이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혁을 했다고 그러는데 누적 수치 적자가 2경 2천조여원 가량에서 179조가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21.2%를 걸어야 걸어야!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마무리 좀 해야 되니까 (발제 자료를 좀)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세요! (발제 자료) 20쪽으로, 이제 20쪽으로 가겠습니다. 이 수치가

윤석명 위원

51:14

이게 미적립부채예요. 국회 예산정책처도 공식적으로 이제 이 자료를 내놓고 있고, 뭐! 국민연금연구원에서도 이전 제도를 기준으로 (미적립부채 추정치를) 내놨습니다.

여기 보면 뭐냐면, 이 제도를 그냥 놔뒀을 때 (즉, 지난 3월 20일 법개정 이전의 국민연금제도) 국가 부채가, 미적립부채가 GDP 대비 2095년에 404.1%가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법 개정된 게 GDP 대비 311.4%로 떨어집니다.

나라가 국민연금 하나로 한 (GDP 대비) 3배가 넘어가는데, 이런 제도가 훨씬 더 강화했으니까! 그렇게 지금 좋아하는 수익률을 1.0%포인트 더 올린 5.5%로 해도 국가부채는 205.2%로 2배가 넘는다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민주당이나 많은 이해 관계자들이 그렇게도 반대하는 자동조정장치 있지 않습니까? 2054년에 도입해도 국가 부채는 167%가 됩니다. 뭘 해도 이거 진짜 불가능한 제도예요. 이게 우리가 봐야 할 수 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발제 자료의) 그 앞으로 그냥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간이 한 9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아! 이거 중요한 거예요!

윤석명 위원

52:19

이제 제가 문제 제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발제 자료의 <부록 1> 에 있는

'현행 및 대안별 재정전망') 이게 작년에 21대 국회에서 5월 달에 한참 논쟁이 벌어질 때 사용했던 수치입니다.

재정추계 결과인데, 여기 수치에 비해서 최근 22대 국회에 들어와 있는 수치들은, 굉장히 GDP 대비 굉장히 낮아졌어요!

이 부분 나중에 이 수치를 제공하는 측에서 규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소득대체율이 더 낮았을 때, GDP (대비 미적립부채) 비율이 더 높았다는 겁니다!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보시면, 소득대체율 (2024년 기준) 42%에서 (예정대로 소득대체율 하락이 진행되었다면) 2028년 40%에서, 보험료를 12%로 올렸을 때가 GDP 대비 총 지출이 10.9%입니다. 그런데 소득대체율을 43%로 올렸을 때, GDP 대비 최고 비율이 10.5, 또는 9.2%! 그럼 뭐가 문제가 상당히 많죠!

윤석명 위원

53:09

앞뒤가! 제가 재정추계 결과를 함부로 흔들면 안 된다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논의할 때는 5년마다 재정계산 제도를 시행하는 그 재정추계 결과를 기본으로 해야지 마음대로 가정을 바꿔가면서 추계를 하다 보니까 불과 1년 만에 재정추계 결과 이렇게 큰 차이가 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몇 가지만 수치 더 말씀드릴게요!

18쪽을 보시면 여기 부과방식보험료, 소득대체율 43%에 보험료 13%일 경우, (기금) 투자수익률이 4.5%일 때, 39.4%. 부과방식비용률이! GDP 대비 연금급여 지출 비율은 9.2%입니다.

이거 의무납입연령 5년 연장하면, GDP 대비 비율이 10.5%가 되고 부과방식보험료가 41.1%가 됩니다.

우리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할 때, 또 여기서 국회 연금특위 21대 자문위원회 회의할 때, 항상 얘기했던 게, 70년 뒤에 가도 우리 국민연금 GDP 대비 (지출) 비율이 7%, 또 8% 밖에 안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도 제가 이 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저한테 제출 안 하더라고요!

윤석명 위원

54:06

결론을 대신해서 제가 이 수치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혼자 시간을 많이 쓸 수 없으니까! 예를 들면 소득대체율 43%에 보험료

13%, 기금투자 수익률 4.5%에, 의무가입연령 64세! (18쪽) 밑에는 표입니다!  
이것만 해도 GDP 대비율이 10.5%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빠진 게 있어요. 기초연금 지출 있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최소  
GDP 2.5%가 나옵니다. 공무원, 사학연금, 군인연금이 빠졌어요! 이거 다  
합치면 GDP 대비 15% 가뿐하게 넘어갑니다.

또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처럼, 의무납입 연령이 만 64세가 아닌, 66세-67세로  
늘린다면, 이걸 더 늘어나겠죠!

이게 우리가 현실로 받을 달고 있는 국민연금 주변 환경이라는 겁니다.

수치에 입각해서 우리가 연금개혁을 논의 해야지, 변진섭의 “희망 사항“을  
언제까지나 부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명호 위원장

55:00

예, 박나리 박사님, 윤석명 박사님,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발제한 자료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을 30분  
정도 가지려고 합니다. 이야기하실 분은 손을 들어서 의사 표명을 해 주십시오.

박명호 위원장

55:29

마이크

~~박나리 위원~~

55:33

~~내가 잘 몰라 마아~~

박명호 위원장

55:35

마이크 가까이 되시면

윤석명 위원

55:38

자동으로 돼요. 누르지 마시고.

박나리 위원

55:39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미적립

윤석명 위원

55:42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안 들리는데

박나리 위원

55:43

미적립부채나 누적적자 계속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우리나라 상황은 이런 건 알겠는데 혹시 다른 나라는 어떻게 미적립부채가 확대되고 있는지 좀 객관적인 시각에서 평가하고 싶어서 혹시 아시는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석명 위원

55:56

네 감사합니다. 같이 발제하신 분이 그런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이제 미적립부채라는 게, 언펀디드 라이어빌리티(Unfunded liability), 이걸 갖고 이제 굉장히 진보, 좌파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은 이걸 사적연금에서 쓰는 개념이다. 특히 제가 이게, 제갈현숙 강사님은 생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윤석명이 쓰는 개념이다. 천주교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최근에 작년에도 했는데, 이게 처음 나오게 된 배경이 뭐냐면? 1994년 “어버팅 디 올드 에이지 크라이시스(Averting the old age crisis)”라고, 세계은행(The World Bank)에서 보고서를 하나를 발간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잘 아실 거 아닙니까? 1980년대 중반부터 스웨덴이 연금개혁 논의를 국회에서 시작을 했지 않았습니까?

윤석명 위원

56:34

그런데 많은 상당수의 2차 세계대전 후에 생겨난 신생국가들은, 공적 연금이 모든 노후소득보장 역할을 해야 돼서, 그러면서 공적 연금을 모든 노후소득보장의 원천으로 의존하고 있었는데, 이게 재정적으로 지속 불가능한 제도이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면 이걸 연금제도가 아니라 국가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그래서, 월드뱅크(World Bank)가 1994년에 발간한 게 “어버팅 디 오데이지 크라이시스(Averting the old age crisis)”입니다. 그러니까

“노년기의 위험 회피를 위해서“. 그걸 하면서 월드뱅크가 바람몰이를 할 때, 그때 중요한 요인이 하나 있었어요!

1990년대 초인가? 동구권, 소련이 몰락하면서 이제 동구권을 시장경제 체제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회주의를 자본주의로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사회주의 그 나라들에서는, 나라가 연금을 보장하던 걸!, 이제는 개인들이 또 어쨌든 참여하는 제도로 바꿔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월드뱅크가 결국 연금개혁의 전면에 나섰어요!

윤석명 위원

57:28

그럴 때 홀츠만(Holzman), 로버트 홀츠만(Robert Holzman) 이런 양반들이, 이제! 동구권 사람들을 하버드 대학에 불러 가지고,

정해식 위원

57:34

다른 나라 사례 어떤 게 있냐고 물어보는데 그걸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지 이거 공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윤석명 위원

57:40

(회의 내용을 상세하게) 공개를 하라구! 그러니까! 그러니까 들어 보라구!

정해식 위원

57:44

회의를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위원장님

윤석명 위원

57:48

아니 질문 대답을 하는데! 왜 그러니까? 들어봐요! 지금! 지금 본론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아니 말을 가로막고 그래! 제갈현숙 강사가 그러더니!

박명호 위원장

57:58

격할게 하나도 없는데 왜 격해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발언 시간을 아까 요구한

것처럼 짧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윤석명 위원

58:08

아니 그래서! 아니 짧게 설명을 하면, 또 이해를 못하고서는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제 본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로버트 홀츠만이 동구권 국가들의 각 국가 사람들 불러다가 이야기한 게! 이게 미적립부채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적립부채 개념을 2007년 노무현 정부가 썼어요! 노무현 정부때는 썼는데, 그 뒤부터 그건 노무현 정부가 개념을 잘못 알고 모르고 썼으니, 그 뒤부터는 못 쓰겠다는 게 국내에서 논의고!! 지금 대다수 국가들은 상당부분은,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제가 여러 가지 현실을 담고 있는 지표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좀 부과방식 이야기만 하는데 여기서 마크로 모형(Macro Model)을 포함해서, 다양한 우리처럼 액취리 모형(Actuary Model)을 포함해서 다양한 지표들을 같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제 결론은 그거예요.

윤석명 위원

58:49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저! 미적립부채나 “언펀디드 라이어비리티(Unfunded liability)“나 이런 개념들이, 어떤 개인이 아니고, 국제기구와 굉장히 위험한 나라의, 어떤 체제 전환하는 나라의 연금 제도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쓰는 개념이고! 결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독일이나 일본, 일본 예들을 잘 알고 있고, 독일이나 이걸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독일의 예를 들면, 독일은 우리가 연금제도를 배워온 나라인데, 우리보다 50-60년 동안 더 보험료를, 많게는 5배에서 6배를 많이 부담해 왔고, 지금도 2배를 더 부담해요!

그러다보니까 이 미적립부채의 개념에서 미적립부채는,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액 대비 부족한 액수“ 아닙니까? 독일은 부과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하고 비교해 보면 미적립부채가 굉장히 적다는 거!

정세은 위원

59:30

좀 짧게 해 주시죠.

윤석명 위원

59:31

짧게 하면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는

박명호 위원장

59:34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회의 중에 발언권을 얻지 않고 말씀하시는 건 좀 자제해 주세요.

정세은 위원

59:40

네 알겠습니다.

박명호 위원장

59:42

윤 박사님 발언 다 끝나셨습니까?

끝났으면, 김원섭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김원섭 위원

59:48

예 독일 얘기 나왔으니까

박명호 위원장

59:51

마이크에 좀 가까이 말씀하시면.

김원섭 위원

59:52

독일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미적립부채는 독일에서는 연금개혁논의 관련해서 저는 거의 본 적이 없고요.

근데 대신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과방식이니까 보험료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보험료 추계를 우리나라처럼 70년씩 하는 경우는 없고, 길게는

40년 짧게는 5년 이렇게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적립 부채에 대해서,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시는데, 저도 찾아봐도 세계은행이 잠시 국제적 연금개혁 논의를 주도한 적이 있었죠. 하지만, 해당 부서가 폐지가 되면서, 이후에는 별 얘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세계은행은 그 외에도 노인빈곤 완화를 강조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부분만 가지고 세계은행의 입장을 판단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윤석명 위원

1:00:57

나중에 다른 의원분들 발언 이 끝난 뒤에 제가 한 말씀드릴 기회를 좀 주세요! 짧게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명호 위원장

네

주은선 위원

1:01:04

네 사실 윤박사님께서 재정계산위원회에서, 소리가 나나요? 네 윤박사님께서 재정계산위원회에서 미적립부채가 이슈가 된 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실관계를 먼저 전달을 드리자면은, 그때 재정계산위원회에서 이 이슈를 이제 윤박사님께서 제기를 하셨고 여기에 관해서 이제 논쟁이 있었어요.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대부분의 위원들이 이 개념을 사용하지 말자라고 얘기 했었고, 기재부에서 이제 와서 이 개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도록 입장에 대해서, 이제 이 개념을 썼을 때 문제와, 혹은 이제 개념이 어떤 측면에서 이제 적절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의견을 주신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개념이 이제 논란이 됐던 거는 이제 그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간단히만 말씀드리면은, 일단 이게 가정치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달라진다는 점 개념상의 문제도 있었어요.

주은선 위원

1:02:05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되는 개념이었고 이게 정리되지 않았다. 이제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명호 위원장

1:02:13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추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가정에 의존하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가정들을 일정하게 유지시킨 상태로 해서 어떤 제도 변화나 인구구조 변화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변화를 보는 것 자체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 그리고 국민연금의 어떤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되게 많이 들고 있는 상황하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은 지표들을 통해가지고 그 재정의 안정성을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작업들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다른

윤석명 위원

1:02:53

이 주제를 다른 분들이 말씀드리면 최종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세은 위원

1:02:59

일단 저희가 전문가들이 모인 그런 자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발언권을 얻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짧게 답변도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 우리가 지금 이것을 논의하는 취지를 좀 명확히 해 주셔야지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윤석명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저에게 질문하라고 하면 20가지도 넘게 할 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문제들이 많아서. 아니 이것만 얘기하면 시민대표단 500명을 선정하기 위해서 작년에 했던 대국민 공론화위원회가 그것도 사기극이었다. 그리고 이들 500명 안에 노인들이 너무 많았다.

근데 그때 저도 참가했지만 500명은 인구 구성에 따라서 인구비에 따라서 그렇게 모였던 것이고, 그다음에 중요한 내용들을 발표하지 않아서는. 아니 국회가 대국민들을 모아서 하는 그 자리에서 중요한 것들 다 발표하고 했거든요.

정세은 위원

1:04:01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일부분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 길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사실 이 안에 너무 많은 것들이 사실 미적립부채도 그것도 이제 우리 전문가들 사이에 논쟁이 있는 그런 개념이고 그래서 대부분이 80% 90%가 다 이게 과학적이다 이렇게 하지는 않는 쟁점이 있는 사안들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이제 쟁점이 있는 사안들이 많다 라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우리가 뭘 논의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건건이 하나하나 다 이렇게 논의를 하자라고 하면 끝이 없을 것 같아서 이게 저희가 30분 논의하고 그다음에 뭔가 결정을 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박명호 위원장

1:04:42

저희가 어떻게 보면 생각이 다른 두 집단이 지금 모여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양쪽의 생각들을 양쪽에서 발표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고받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어떤 생각을 다시 한번 되짚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30분 정도 논의를 하자는 거였고요. 향후 30분 정도 어떠한 주제들을 다룰 건지도 간략하게 얘기할텐데, 그때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갈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워낙 시각차가 크고, 다양한 시각이 존재할 수 밖에 없고 합의를 이루기가 쉽지 않은 구조인 것 같아요.

박명호 위원장

1:05:30

그래서, 연금개혁 특위에서도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민간자문위원회에서 단일의 어떤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않다 하더라도 연금개혁 특위에서 궁금해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병렬적으로라도 의견을 제시해 주면, 자신들이 심사숙고해서 확인해 보겠다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세은 위원

1:05:55

그럼 간단히 30분밖에 토의시간이 없다면 여기 계신 20 몇 분의 발언권을 다 확보하기 위해서 가급적 쪽 돌아서 1분씩 하고 싶은 얘기 쪽 하고 그런 식으로라도 좀 확보해야지 어떤 부분이 앞에 잡아가지고 5분 하고 하면 이거는

박명호 위원장

1:06:08

그거는 위원장이 알아서 좀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회의다 보니까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는 한번 좀 지켜보고 또 주은선 교수님과 상의해가지고 발언 시간 제한하는 것을 의논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윤석명 위원

1:06:24

죄송한데 미적립부채 이슈를 좁혀서 한번 말하고 다른 이슈로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결론 지어야 될 게 있어서 이래요.

박명호 위원장

1:06:31

예 그러면, 윤석명 박사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윤석명 위원

1:06:34

저희 회의 끝난 뒤에 여기 전체 위원분들한테 좀 공람을 시켜주세요!

2024년 11월 17일자의 [윤석명의 연금개혁 이야기] '망국행 연금 고속열차' 여기서 멈춰 세워야 한다! 그 칼럼에 있는 내용입니다!

뭐냐하면, 최기홍 서울대 경제연구소 객원연구원이 강조해 온 내용이다. “미국과 캐나다는 사실상 무한기간을 재정평가 기준으로 삼는다. '지속 가능한 지불능력(Sustainable Solvency). 이게 인제 실제로 의미하는거는, 그러니까 '서스테인너블 살번시' 개념을 통해서 무한대로, 저! 양수가 나타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자동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미적립부채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미적립부채가 많다고 그러면, 우리처럼 해결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인파이나이트 피어리어드(Infinite period)“에 걸쳐서 그게 양수로 나타나지 못하겠죠! 그래서 지금, 아까 저한테 말씀 주신, 해외 사례가 어떠냐고? 그럴 때, 가장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미국의 OASDI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내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김학주 위원

1:07:32

지금 미적립부채 문제를 언급해야 되냐 말아야 가지고 격해지시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보험수리적 불균형이 발생하면,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선진국 정치권, 언론, 학계가 모두 다 다루는 논제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미적립부채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보험수리적 불균형이 발생한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험수리적 불균형을 언급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고 해외에서도 논의를 합니다.

그리고 자동조정장치를 갖춘 스웨덴 같은 유럽국에서는 불균형이 감지되면 급여 및 기여 조정이 자동으로 반영이 되어요. 그러니까 보험수리 불균형 부분은 언급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현실에 기반한 논의목적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연금특위 전문가로서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저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김신영 위원

1:08:28

분위기가 살벌해서 다행히 자문위원 활동 기간이 좀 늘어져서 야구는 우리가 한 3회 하고 마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9회까지 하신다고 하니 일단 그거 다행입니다.

원론적인 말씀을 좀 드리면 여기 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일종의 게임 상황으로 한번 비유를 해보면 이건 일회성 게임은 아니죠. 일회성 게임에 배반자가 항상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먹고 튀는 사람이 항상 이기는 게임이고요. 이거는 반복 게임이에요.

성년기 이후로 죽을 때까지 결국 어떤 제도 자체가 게임의 법칙이 유효리가 확실한 상황에서 이걸 또 법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자기가 참여를 한다 못한다를 선택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정부의 역할은 누가 보기에든 공정한 룰 세팅을 해야 된다.

추상적인 얘기입니다마는. 그러나 적어도 제가 보기에 지금 당장 수치상으로 드러나는 유효리가 분명히 확실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 역할이 그런게 아닌가 싶고요. 두 번째는 도덕의 언어가 아닌 사실의 언어로 좀 얘기를 하자.

김신영 위원

1:09:47

제가 말을 점잖게 표현해서 도덕의 언어라고 표현했지. 어떤 경우는 좀 더 근사하게 표현하면 답론 이런 거죠.

근데 이게 선전 선동과 사실 한끗 차이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시작할 때 개념 정의가 돼 있고 관찰할 수 있는 조작적 정의가 가능한 그런 언어들로 회의가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체의 정치적 고려는 여기서는 하지 않아야 된다. 국회의원들은 할 수 있죠.

그러나 국회의원들이 저에게 공을 넘긴 이유는 그런 고려를 하지 말아달라라고 아마 저에게 넘긴 것 같습니다.

마치 미국 사법 제도에서 배심원 제도가 있듯이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이 누구든지 매수인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여기는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자리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유해야 되는 원칙은 일체의 정치적 고려가 있으면 안 된다.

김신영 위원

1:10:41

마치 존 롤스가 얘기하는 무지의 내일 속에서 원초적 일치 나도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이렇게 결정했을 때 누가 가장 이익을 받는지 그것과 내가 전혀 관계가 없는. 이런 상황에서 이후에 논의들을 진행시켰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명호 위원장

저도 박나리 박사님이 발표한 것에 첨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세대 간 비형평 관련해서 젊은 세대들은 기대수명이 연장되어 혜택을 보니까 좀 더 내는 것과 서로 상쇄되니 괜찮은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였는데, 수급개시연령 또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저와 같이 50대 중반인 사람의 입장에서 젊은 분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되게 감사한데, 제도적으로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평가하더라도 세대 간 불공평한 그런 시스템이 내재되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걸 안정화시키는 과정 속에서 그러한 불공평은 더 심화될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명호 위원장

1:11:43

또 한 가지는 국가의 지급명문화가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폰지사기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국가가 국민연금이 힘들어졌을 때, 국민연금의 기금이 고갈된 후 많은 적자를 그 당시의 젊은 친구들이 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과연 국가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역량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점도 우리가 고민해봐야 합니다. 국민연금에서 재정추계를 하는 것처럼 국가재정에 대한 재정추계를 하고 있는데 2065년 되면 국가채무 비율이 156.3%라고 합니다.

일반 정부 기준으로 하게 되면 160%가 훨씬 넘는 수준입니다.

박명호 위원장

1:12:32

지금 프랑스에서 110% 넘는 것 때문에 그 난리가 나고 있는데,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시점에 가서 국가재정의 모습이 안정화되는 모습이라면, 부채가 160%를 넘는다고 하더라도 안정화되는 상황이라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라는 거는 매우 급속도로 빠르게 성장을 합니다. 좀 더 긴 시계를 보게 되면 200%를 넘어갈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일본이 겪는 것 이상으로 한국의 재정 상황은 안 좋아질 것입니다.

그런 상황 하에서 국가가 걱정하지 마. 내가 내줄게라고 한다는 것 자체는 그게 폰지사기와 다를 바 없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가 대통령께서도 연금개혁에 대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자체는 그런 책무성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박명호 위원장

1:13:22

그리고 연금개혁특위도 그런 상황을 우려하는 것 같구요. 여러분들이 기재부에서 발표한 장기재정전망 보도자료를 잘 보게 되면, 아까 윤석명 박사님이 얼핏 얘기하신 것처럼 사회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기여를 기반으로 해서 운영이 되는데, 가급적이면 나라 재정이 장기적으로 힘들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회보험 자체가 스스로 독립적으로, 재정적인 안정화를 이룩해 나가는 게 나라 전체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보는 그런 논의를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나라 전체의 재정을 보는 기관에서는요.

일 안 하고 놀고먹는 세상, 내가 부담 안 하고 많이 받는 세상 그거는 누구나

다 원하는 거지만 그런 세상이 어떻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박나리 위원  
저도 답변 해도 될까요?

박명호 위원장  
잠깐만 먼저 얘기하시죠.

신승룡 위원

1:14:17

예. 저도 분위기 전환 좀 전해 보고 싶은데, 일단 박나리 박사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기 어찌면 듣고 나서 지금 같은 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하는데, 제가 좀 공감이 안 가는 부분 몇 가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공포 마케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실체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이 민간자문위원으로 이렇게 와서 저는 정말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어느 정도 이제 사회적 지도층에 이렇게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국고 투입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저희가 여기에서 합의를 보면서 설득해야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근데 국고 투입을 결정하는 건 누구냐면 일단은 기재부입니다. 실제로 기재부 사무관님이 저쪽에 계시는데 일단 저분을 설득해야 돼요. 그런데 아무런 공포 없으면 저분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신승룡 위원

1:15:17

공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고 투입을 동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분을 설득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국민을 설득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런 공포가 없는데 어떤 수로 저희가 국고 투입을 한다라는 건지 그 공포를 실체를 받아들여야만 저희가 주체적으로 그걸 설득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신규연금 분리를 주장하는 건데 그 이유가 분리를 하고 난 다음에 국고투입은 뭐냐 하면 그 공포가 실체화가 됩니다.

저희 연금수급액이 결정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주장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국고 투입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저도 기존 운용수익률이 6%로 쪽 갔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너무 좋아요. 10% 넘고 더. 그건 정말 긍정적인 현상입니다.

신승룡 위원

1:16:08

다만 그러다가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이 시스템은 뭐냐 하면, 뭐 다시 안 올라오면 말고, 모든 걸 이제 미래세대에 넘기는 그런 시스템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금운용수익률 상황에 따라서 자동조정장치를 탑재해가지고, 저희가 그 낙관론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런 시스템을 구조개혁을 해야 된다. 그런 논의가 앞으로 이 위원회에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박명호 위원장

1:16:39

혹시 박나리 박사님 발제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그걸 마저 듣고, 박나리 박사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박종상 위원

1:16:47

네 저는 숙대 박종상이라고 합니다. 좀 전에 박사님 말씀하신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 혹시 10페이지 좀 같이 보면서 얘기하시죠? 제가 궁금한 것과 좀 제가 하고 싶은 거를 다시 10페이지에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10페이지 보시면 지금 이제 부과방식비용률에 대한 공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약간 이걸 진일보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좀 찾아보다 보니까 기금 고갈이라는 게 선동이고 공포 마케팅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던데, 그래도 적어도 그거 기금 고갈에 대해서는 이제 부과방식비용률과 연관시켜서 이게 위험할 수 있다는 거는 일단은 받아들여진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박종상 위원

1:17:41

근데 이제 부과방식비용률에 대한 공포라고 하셨을 때 여기서 왜 이게 공포냐 하면, 이거는 앞으로 여기서 나오는 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기금 소진 이전 국고 투입 또는 보험료율 인상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을 때 보험 비용이라고 하셨어요.

그거를 조금 행간을 제가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보험료율 인상은 또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근데 그 말씀은 뭐냐면 지금 청년 세대들은 너희 한테도 잘해주는 거야라고 하지만 조금 있으면 이거 안 되겠네 해서 조금 더 인상해야 되겠네라고 바뀔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우선 인정을 하신 것 같아서 그걸 한번 좀 확인을 받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 앞에 앞에 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굉장히 좋은 그래프를 하나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한 5페이지입니다.

안타깝게도 2001년에서 잘렸어요. 2001년에 그냥 잘랐습니다.

그게 사실은 이제

박나리 위원

몇 쪽 말씀하시나요?

박종상 위원

1:18:46

5페이지 네 그러니까 미래 세대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네 그러니까 아마 미래 세대까지 넣으면 사실은 이게 균형이 안 맞아가지고 그리실 수가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지금 이제 이번 국민연금 개편 윤 박사님께서서는 개악이라고 하시지만 어쨌든 개편이라고 저는 중립적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개편안은 일단은 중장년한테는 이제 잘해주는 거고 그다음에 청년한테는 조금 나빠지긴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처음에 제도, 1988년에 세웠을 때부터 문제였었던 거고, 아주 조금 나빠지지만 그렇게 나빠진 건 아니야, 그리고 이제 미래세대는 사실 굉장히 나빠지는데 그거는 이제 빠졌단 말이에요.

박종상 위원

1:19:29

여기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백워드를 생각해 보면, 미래 세대는 굉장히

나빠지는 걸, 우리가 가시적인 시기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 청년세대들이 그러니까 중장년이 됐을 때, 그때 다시 한번 보험료율 악화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에는 약간 암묵적으로 들어가 있고, 제 생각엔 10페이지에는 좀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다는 게 생각이 하나 들었었고요. 두 번째는, 사회자님 저 이렇게 길게 해도 되는 겁니까?

GDP 대비 급여 지출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급여 지출을 나누는 분모값을 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이 아니라 GDP를 놓자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굉장히 낮아지는 약간 착시 효과가 있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GDP 내에서 보험료율을 부과할 수 있는 소득이 일부가 있고 나머지가 굉장히 많은데 왜 나머지는 지금 부과를 하지 못할까를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박종상 위원

1:20:27

왜냐하면 지금 이거를, 이것도 제 생각엔, 제가 행간을 해석을 하다 보면은, 지금은 보험료를 부과되는 소득이 되게 작지만 나중에 넓힐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저는 이해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못하고 그때는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를 먼저 제시를 하셔야, 이게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박명호 위원장

1:20:49

네.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면.... 네, 박철언 위원님 말씀하시죠.

박철언 위원

1:20:52

네 박철언입니다. 신승룡 위원님께서 국고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거기다 한 말씀만 더 첨언을 하겠습니다.

국고라는게 공간이라면은 그 공간에 있는 그 곡식이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곡식이 계속 채워져야 되는 거고 국고라는 건 결국 조세로 충당이 됩니다.

그 조세를 누가 부담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 기금 고갈 시에 조세를 투입한다는 거를 감안해서 보통세를 도입을 하게 되면, 결국 보통세 부담하는 거는 결국 고갈 시점에서 가장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을 지금의 청년세대입니다.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조정으로서 본 이득 부분을 보통세 인상으로서

해결한다면 그것은 그냥 아랫목에서 윗목 들어맞는 격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보통세 관련해서 보완하고자 이제 민주당 연금특위에서 제시하신  
방안인 게 자산세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이 자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계층  
분들은 조세 탄력성이 굉장히 높은 분들입니다.

박철언 위원

1:21:54

그래서 이분들이 시장, 고소득자, 기업 이런 분들은, 소득세 그러니까 자산세를  
더 높게 물게 된다면 그건 자연스럽게 시장이 반응하게 되고 시장은 자연스럽게  
위축되게 되고 그 시장 위축의 직격탄을 맞는 것은 당장의 고용 시장에서의  
노동자들이고, 그 당시 노동시장에 있는 우리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이 국고 투입이 본질적으로 조세와 관련돼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조세의 부담자가 누구인가를 고려하고 생각한다면은 국고 투입을 기금 고갈의  
어떤 대안으로서 제시하는 거는 굉장히 좀 신중히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발언으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호 위원장

1:22:36

그리고 박나리 박사님께서 얘기하시고 꼭 박나리 박사님만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다른 분들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다른 위원분들이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박나리 위원

1:22:47

답변할 수 있는 거를 중심으로 답변을 드리면, 우선 제가 기금소진 이전 국고  
투입이라고 말씀드리고 보험료율 인상 말씀드렸는데, 기금 소진이 된 이후에  
그때 가서 한꺼번에 돈을 왕창 투입해야 한다는게 아니라,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예산의 1%를 미리 기금에 투자를 하면  
그것을 통해서 또 수익금이 날 수도 있고 여러가지 방식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을 논의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제가 이런 글을 써냈던 것이고요.

보험료율 인상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6페이지 보시면 OECD 같은 경우는  
평균 보험료율이 15.35%입니다. 이 중에 근로자의 몫은 6.3%이고, 사업주의  
몫은 9.1%로 우리나라처럼 반반을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어느 정도 더 부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고 이러한 방식으로

보험료를 인상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나리 위원

1:23:52

이러한 다양한 가능성을 열고 좀 논의를 하자라는 말이지, 이것이 사실 이렇게 해야 한다 이것이 이것만이 정답이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미래세대 관련해서, 80년대 가면 그들이 더 문제가 된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도 이렇게 조기에 미리 국고를 투입해서, GDP 대비 1% 예산안이 누군가에게 엄청 부담이라고 말 할 수 있지만, 미래세대가 이것으로 혜택을 볼 수 있다면, 그리고 인구 구조가 언젠가는 이제 조정이 돼서 균형을 이루게 될 텐데, 그것을 이제 누군가는 2100년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정도 되면은 이제 부과방식으로 그때 가서는 전환을 해도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시점을 우리가 다양하게 여기서 고민을 해서 다양한 논의를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작성을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장기 균형 재정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분명히 이 장기재정균형 굉장히 중요하고 부과방식비용률도 중요합니다.

박나리 위원

1:24:54

무시하자는 말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좀 더 조심히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위원장님께서 아까 혜택이 승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노령연금 평균 수급액이 65만 7천 원이고 전체 노인으로 합치면 이제 한 20~30만 원대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봤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 막대한 혜택을 받았나라고 정말 말씀하실 수 있을지, 그리고 이 정도 금액이 지금 생계급여 기준선에도 미달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재정으로, 국민연금을 통해서 이게 보완받지 못한다면 어쨌든 기초연금 어쨌든 생계급여를 통해서 지출이 되어야 하는 돈입니다.

박나리 위원

1:25:40

그 출처가 달라질 뿐 어쨌든 국가가 내야 하는 돈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자기의 역할을 좀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발표를 드렸고, 또 저는 반대로 미래의 장기 균형 관련해서, 여기 경제학자분들 많으신거

같은데, 제가 하나 질문하고 싶은게, 마지막 페이지에 써놨는데요.  
2060년이 되면 우리 노인 인구가 이제 40%를 초과하는 사회가 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GDP 대비 10%, 최대 10% 정도의 소득이 간다 그러면 인구의  
40%의 소득은 GDP 대비 10%에 한정되지 않습니까?

박나리 위원

1:26:23

이렇게 되는 사회에서 과연 내수는 어떻게 될 것이며, 그러면 경기 침체는  
어떻게 될 것인지, 과연 저는 도저히 그 사회가 상상이 되지 않는데, 이러한  
사회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정말 국민연금을 내버려 뒀서 이들이 보장성이  
강화되지 않으면 소득이 확보될 것 같지가 않는데, 이런 상황에서 내수 침체나  
경제성장 등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논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명호 위원장

1:26:49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60만원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60만원을 받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얼마를 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넌 것에 비해서 너무 많이 받으니까 그래서 **이제** 불공평하다는 거고요.  
그 레벨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낸 것에 비해서 생각을  
해야지, 받는 것만 생각을 해 가지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국고 투입과 관련해서 GDP의 1% 투입이 가능하겠냐? 지금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4%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5년 간 이재명 정부에서 예상하고 있는 중기  
흐름도 4%대입니다.  
그럼 5%대를 기록하자는 건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국가신용등급에도 문제를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박명호 위원장

1:27:36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국가가 막연히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많은 간격을 **뚫아** 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가도 힘들어서 가급적이면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한쪽에선  
계속 얘기하는데, 한쪽에서는 국가가 재정을 투입하면 다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한다 그러면, 그 간격은 계속 벌어질 수 밖에 없고요. 국가가 부담하는  
것 자체는 다 빚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미래세대가 같이 다 갚아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세은 교수님 먼저 말씀하시겠습니다.

정세은 위원

1:28:10

예 우리 네 죄송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위원장님은 위원이시니까 발언도 하실 수 있겠지만 (공동위원장 두 분이) 돌아가면서 내려오고 하시니까 위원장님이 단상에 계실 때는 사회에 집중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미적립부채에 관해서 아까 우리 김학주 위원님이 이게 미래 재정 불균형인데 이거를 말하지 못할 이유가 뭐냐. 그래서 저는 거기에 동의해요. 그런데 이제 미적립부채에 대해서 이런 거죠. 1경 얼마 얼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미래에는 물가가 계속 오르기 때문에 그것을 다 절대 기준으로 얘기하다 보면은 이게 말은 맞지만,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 뭐냐하면, 이게 많다 적다라고 얘기하려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재정 계산 뒤에 보면은 GDP 대비 몇 퍼센트라고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과학적인 개념이다. 우리가 GDP 대비 6%라고 해서 그거를 이해 못할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정세은 위원

1:29:14

그런 점에서 저희가 GDP 대비 몇 %라고 하는 재정 계산 중에 나와 있는 걸 쓰면 된다고 하는데, 자꾸 그 몇 경 얼마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70년 미래를 잡거나 100년 미래를 잡거나 뒤로 잡을수록 그걸 다 현재화하면 어마어마해진다는 점에서 불균형을 과장하는 것입니다 다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아니 제가 뭐라고 한 게 아니,라 아까 이제 불균형 된 걸 쓰지 말라고 하니까 그건 아니다. 쓰는데 그 용어를 뭔가 기준이 있게 쓰는 것이 맞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조금 객관적인 팩트를 가지고서 논의를 하는 게 좋겠다. 물론 팩트라고 하는 것이 100% 팩트는 없습니다. 항상 그 정의가 무엇이냐 아니면 가정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다른데, 정의하고 가정을 명확하게 한 상태에서의 어떤 계산 결과를 놓고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정세은 위원

1:30:05

정의하고 가정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서로 다르게 생각하는 것까지 좀 이해하면서 논의가 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재정 계산도 최근에 GDP 시계열도 달라졌고 해서 저는 최근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재정 계산 좀 다시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좀 얘기할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예를 들면은 민간에 몇 % 보험료만 내도 나중에 지금 돌려주는 개인 연금 보험 같은 경우에 20세에 가입해서 6%대로만 수익이 나도 수익비가 3.23배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 지금 국민연금이 사실 연금개혁 2008년 이후에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게 과대하게 받는다고 할 수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생각하기로는, 아니 이 정도 수익을 줄 거면 민간 보험에 비해 이게 매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정세은 위원

1:31:00

그럼 도대체 2008년 이후에 연금개혁으로 대부분 내는 만큼 그 수익을 불린 것만큼 받는데, 왜 이렇게 어렵냐. 제가 봤을 때는 1988년부터 2008년 사이에 그때에 조금 내고 많이 받는 그분들이예요. 그분들이 이제 은퇴하시고 그게 계속 국민연금에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처리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은 그거를 국가가 이렇게 해결해 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왜 보험료가 아니라 국가가 풀어줘야 되냐, 그거는 국민연금 자체가 탄생 때부터 완전히 보험료 기반으로 그것을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국민연금 처음 도입했을 때 어떻게 했냐하면 그 돈 가지고서 국가 정부 채권 사서 나라 경제 발전한 거거든요. 그래서 나라 경제 발전시킨 거를 국가가 다시, 이게 이제 국민연금은 국가 경제하고 한몫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 완전히 동떨어져서, 사실 그렇게 동떨어져서 했을 것이었으면 처음부터 국민연금 보험금을 국가 채권 수익률 낮은 거기에 넣어서는 안 됐었다라는 얘기에요.

정세은 위원

1:31:56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큰 맥락에서 봐야 되고, 그래서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현재 이렇게 어려운 거는, 처음에 초기에 돈 조금 내고 70% 소득 대체율로 받아간 그것이 계속 남아 있는 거고, 그럼 그거를 국가에서 해결해 주든지 아니면 그 후손인 저희가 다 같이 나눠서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미래에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 2050년 이후에 그 후세대가 다

부담해라 이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그 논의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럼 그 논의를 함에 있어서 국고 투입을 하면 지금 당장 국고를 내야 될 세금을 올려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어렵다. 그러면 이걸 하지 말자는 얘기죠.

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려운 사람이 있고 안 어려운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 큰 프로젝트를 같이 함에 있어서 잘 설계해서 하자. 그렇게 가는 것이 맞겠다라고, 여기도 많은 논쟁거리가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명호 위원장

1:32:52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는데 김원섭 교수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김원섭 위원

1:32:54

국가가 다 한다는 위신 이야기까지 나와서 약간 좀 어처구니없기도 하고, 우리나라처럼 국가가 노인에 대해 아무것도 안하는 나라가 세상에 없잖아요. 나라가 점점 잘 사니까 노인빈곤이 발생하는 거고, 다른 선진국 같은 경우도 처음부터 노인빈곤율이 이렇게 낮았던 것은 아니었던 말이죠. 우리나라가 급속한 경제 성장을 하니까, 일을 하는 젊은 사람들은 일을 더 이상 못하는 노인보다 부자인 것이죠. 우리나라 경제수준이 70년 이후 20배가 증가했는데, 옛날에 일했던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돈을 벌었어도, 지금 일을 못하면 빈곤에 빠지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런 문제는 어느 나라나 다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는 연금제도가 들어와서 국가가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김원섭 위원

1:33:46

그래서 되든 안 되든 힘들지만 보험료도 모으고 국고도 모으고 이렇게 해서, 지금 겨우겨우 이제 이 빈곤율을 낮춰놓고,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안했고, 2006년도에 처음으로 노인 빈곤율이 45%라는 게 드러났는데, 지금 40%예요. 지금 다른 나라에서 무슨 노인 빈곤 (해결)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 거 아니에요. 15년에서, 10년에서 15년 사이에 미국도 마찬가지로 독일도 마찬가지로 영국도 마찬가지로 30% 정도 되는 노인빈곤을 10년 15년 사이에 절반으로 다 낮춰요. 근데 우리나라는 하나도 안 해놓고 무슨 국가가 뭘 한다고

될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은 오늘 어차피 이거는 상견례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하나 뜯어보고 이야기하면 사실 아까 윤석명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밤새도록 논쟁을 해야 될 것이, 윤석명 박사님하고 저하고는 밤새도록 협의를 했어요.

근데 어차피 계속

윤석명 위원

1:34:45

제대로 한 적이 없어요!

김원섭 위원

1:34:46

한 적은 없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이정도 하시죠

윤석명 위원

1:34:55

저 2-3분 발언할 기회를 줘! 한번만 더 주시면 좋겠어요! 나중에요

박명호 위원장

1:35:00

잠시만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주은선 교수님 말씀하시지요.

주은선 위원

1:35:06

아니요. 의사진행 발언은 아니었는데, 윤석명 박사,,,

박명호 위원장

1:35:10

가급적 토론과 관련해서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주은선 위원

1:35:14

토론화는 아니고 사실관계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박명호 위원장

1:35:20

그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주은선 위원

1:35:21

1페이지에, 윤석명 박사님 발제문에 양 위원회 소속 전문가가 소득 대체율 40, 보험료 15 인상안에 대부분 압도적 찬성했다라고 했는데 이걸 좀 사실과 다르고요.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공론화까지 가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걸 사실과 좀 다르다.

그리고 공론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이제 지금 연금개혁, 2025년 연금개혁의 어떤 타당성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근데 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건 아닌데 어쨌든 첫 번째 문제점으로 얘기했던 부분, 이게 이제 샘플링을 위한 질문은 여기 나와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사실과 다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18페이지 맨 마지막에, 이제 계산 자료를 주셨는데, 이게 이제 국회 연금특위 내부 자료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지난 이제 3기 연금특위 내부 자료인지, 이제 어떤 회의 자료였는지 이걸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명 위원

1:36:24

저한테 발언 기회를 꼭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한 3분 정도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명호 위원장

2분 드리겠습니다.

윤석명 위원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미적립부채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거! 제가 결정적인 증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6월 28일 (발간된 자료입니다.)

“어널리시스 오브 더 2025 소셜 시큐리티 트러스티스 리포트(Analysis of the

2025 Social Security Trustee's Report)“. 미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간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소셜 시큐리티 페이스 어 라지 액추어리얼 데피시트(Social Security faces a large actuarial deficit)라고 하면서, GDP의 1.3%가 부족하다는 게, 이 미국 재정계산 보고서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거 논란이 안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 그 다음에 뭐죠! 우리 주은선 공동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이거 팩트가 다르다고 하는데, 2023년 1월 30일 전후에, 국회 1기 연금특위 15명 위원들이 투표를 했어요! 제가 낸 안(소득대체율을 40%로 현행 유지-보험료는 15%로 인상)에 대해서 (전체 위원) 15명 중에서 10분이 찬성했습니다. 그것까지도 부인을 하지는 않겠죠! 그다음에 (행정부가 주도했던) 재정계산위원회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를 증빙할 수 있는 내용들이 상세회의록에 있다는 의미의 발언임)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추계자료 있지 않습니까?

윤석명 위원

1:37:26

(발제 자료의) 18쪽 (표에 있는 내용을) 제가, 누구보다도 지금 문제 제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재정추계를 할 때는, 2023년 5차 재정계산에서 쓴 그결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이 나침판을 계속해서 흔들고 있거든요! (발제 자료의) 이 18쪽에 있는 거는,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지난 4월 중순경에 추계한 자료입니다! 가장 최근 자료입니다!

박명호 위원장

1:37:44

그러면, 오늘의 토의는 이 정도로 하고, 향후 일정하고 저희가 좀 결정해야 할 문제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이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의 일정인데요. 12월 달에는 저희가 두 차례 회의를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시하는 일정에 대해서 좀 확인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12월 5일 오후 3시 그리고 12월 19일 오후 3시입니다. 혹시 이 일정과 관련하여

정세은 위원

1:38:17

9일하고 언제요?

박명호 위원장

1:38:19

12월 5일, 12월 19일

김원섭 위원

1:38:22

12월 19일에 사회학회가 있어서 약간 시간이

주은선 위원

1:38:29

앞주로, 2주 연속 하면, 5일하고 12일로 하면은?

김원섭 위원

1:38:37

12일 관촬조

박명호 위원장

1:38:38

12일은 제가 안 되고요. 그러면 18일은 어떠신가요?

○○○ 위원

아니 일단 얘기를 다 들어보고요.

정세은 위원

1:38:47

스물 몇 명 다 맞추기가,,

윤석명 위원

1:38:49

몇 분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러면

박명호 위원장

1:38:51

그러면 일단 그러면 12월 5일은,,, 왜냐하면 저희가 일정을 정하지 않으면 일정 잡는 게, 너무 인원이 너무 많아서 몇 분은 빠지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일정을 좀 세팅을 하고 가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세은 위원  
5일 좋습니다.

윤석명 위원

1:39:10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얘기하면 안 되는

박명호 위원장

1:39:14

네 그래서 저희가 공동 주은선 교수님하고 얘기한 거는 한 80% 이상이 참석할 수 있다 그러면, 일정을 잡자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정세은 위원

1:39:23

됩니다.

윤석명 위원

1:39:24

손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정세은 위원

1:39:27

12월 5일 되시는 분?

박명호 위원장

1:39:28

그러면 12월 5일은 회의하도록 일정을 잡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회의는 그날 12월 5일에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세은 위원  
여기서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박명호 위원장  
19일은 안 된다는 분이 계시니까 18일은 어떤가요?

윤석명 위원  
1:39:45  
될 것 같은데

박명호 위원장  
1:39:47  
그럼 19일 날 일단 하겠습니다. 그러면 12월 5일 3시 2차, 12월 19일 3시 3차 회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 안건과 관련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 운영안이라는 거 못 받은신 분 계신가요?

정해식 위원  
1:40:17  
어디로 보내셨어요?

김원섭 위원  
1:40:18  
어디로 보냈어요? 어디로 보냈대요? 확인 안 해봤어요

박명호 위원장  
1:40:23  
이거 메일 보낸 건 아닌가요? 혹시 지금이라도 프린트해서 갖다 줄 수 있나요?

박명호 위원장  
1:40:37  
파일 있으면 파일 띄우셔도 되고요.

윤석명 위원

1:40:38

회의 끝난 뒤에 이메일로 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

박명호 위원장

1:40:41

네. 이게 연금개혁 특위 위원장실에서 마련을 한 안이고, 그리고 양당의 오기형 간사님하고 김미애 간사님 두 분이 특별한 이의 제기를 안 하셨기 때문에 합의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연금개혁 특별위원회가 연금재정의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재정안정화 조치 및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의 개혁방안을 논의하는 게 기본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제시한 논의 안건들이 있습니다.

박명호 위원장

1:41:17

그래서 오늘 한 것이 개편된 국민연금법에 대하여 평가하는 논의를 가졌던 거고, 그 다음 주제로 요청하시는 게 가능한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연금재정 안정화 방안, 세 번째 안이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방안, 그리고 네 번째 안이 기초·퇴직·개인연금 개혁을 통한 다층연금체계 구축,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안이 **공적연금**의 세대 간 형평성 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이런 식으로 안건이 짜여져 있거든요.

이러한 안건들을 저희가 매 회의할 때마다 하나씩 소화를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민간위원들께서 제기해 주시는 새로운 안들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합의를 해가지고 추가적인 논의를 하는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명호 위원장

1:42:15

그래서 오늘처럼 양 진영이 존재할 수 밖에 없고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릴 수 있기 때문에, 각 주제에 대해서 오늘처럼 양 진영에서 한 분씩, 두 명에서 25분씩 발제하고 한 30분정도 논의하고, 그리고 논의하는 시간은 오늘처럼 의사결정할 사항이 많지 않다고 하면 논의하는 시간을 좀 더 늘리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세은 위원

1:42:44

그거 근데 뭐가 있어야지 약간 이렇게 쪽 들은 것만으로는 그러나 양쪽에 위원장님이 오케이를 하셨다면 그냥

박명호 위원장

1:42:52

그래서 지금 화면으로 띄우실 수 있다면.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건은 다시 말씀드리면, 다음 주에 논의해야 될 게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연금재정 안정화 방안, 그리고 그다음 주 19일에 논의의 주제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방안입니다.

정세은 위원

그건 되게 넓은 거네요.

박명호 위원장

넓다 하면 넓은 수도 있고, 좁다고 하면 좁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각자 준비하는, 어떤 분이 준비할지도 생각을 하셔가지고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개편 방안도 상당히 브로드 하잖아요?

정세은 위원

1:43:31

위원장님, 다음 주 주제는 딱 들어오는데, 그다음에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방안 이렇게 하니까 이게 너무 넓어서, 두 분이 얘기하실 때 어떤 걸 얘기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셨는지는 약간 설명을 좀

주은선 위원

1:43:45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요. 일단 저기 위원장실에서 이제 쫓던 주제는 큰 주제들이잖아요? 일단 그래서 큰 주제를 먼저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논의하고 그 사이에 이제 세부 주제들을 정리해서 정리하고 또 이제 위원님들 의견도 받고 해서 의견들을 세부 주제들을 스케줄을 잡아서 정리를 해서 이제 논의를

하자 그런 식으로 얘기를 나눴습니다.

정세은 위원

1:44:10

이제 세부 주제를 잡기 위해서 우리 전체가 다뤄야 될 큰 주제가 무엇이냐는,,,

주은선 위원

1:44:15

그렇죠 예. 오늘 논의하면서도 아마 이제 몇 가지 주제들이 떠오르셨을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박명호 위원장

1:44:21

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마 위원들분들께서  
그러니까 재정추계와 관련된, 아니면 국민연금의 미래의 모습에 대한 궁금한  
사항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그러한 것들은 오늘 복지부 과장님도 오시고  
기재부 사무관님도 오셨다고 하는데, 협조를 충분히 해주시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태엽 복지위 조사관님한테 주시면 아마 취합을 다 할 겁니다  
복지위에서 취합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가급적 일찍 생각하는 자료들을  
요청을 해주십시오. 준비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니까 좀 필요한 자료들이 있다고  
한다면 생각을 하셨다가 다음 회의 때라도 제출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모든 위원들한테 다 공개된다는 걸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철언 위원

1:45:17

위원장님 한 가지만 저 질의 겸 약간 당부 말씀인데, 1차 연금특위와 이제 그  
당시 자문위에 민간자문위 진행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대한 어떤 연구  
결과로서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평가들을 보면은 하나같이 너무 침예한 사안이다 보니까 각 진영이 자기 할  
말만 하다가 끝났다라는 평가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번 민간위원회에서도 치열한 논쟁을 이어가겠습니다마는 이제 전  
단계 민간위원회 같이 논쟁만 하고 자기 할 말만 하다가 어떤 합의안 없이 이

민간위가 끝나는 것은 민간자문위 취지에도 맞지 않고, 저희가 그냥 국회의원 분들 연금특위의 들러리밖에 역할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진영에서 물론 발제를 이제 추후에 계속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발제는 물론 저희가 얘기를 하기 위해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한 어떤 마중물이 되겠습니까마는, 그 얘기로써 끝나지 않고 위원분들이 어떤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어떤 복안이 있으신지 그 방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명호 위원장

1:46:19

그러니까 실은 저희도 이 회의에 오기 전까지는 기본적으로 연금개혁 특위가 12월 말까지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사실은 김미애 의원님도 그렇고 오기영 의원님도 그렇고 연장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위원장님께서서는 일단 법으로 주어진 기한이 12월 말이기예, 저희 활동 자체도 11월 말까지 한 다음에 그 결과를 연금개혁 특위에 넘겨주면, 12월 한 달 동안 연금개혁 특위 안에서 국회의원들께서 논의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오늘 새롭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까지 연장된다고 하였고 때문에 그런 시간 제약은 좀 많이 해소된 것 같아요.

박명호 위원장

1:47:08

그래서 지금은 일단 주요한 주제들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그리고 저희가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각 주제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의 합의 도출을 하는 그런 시도는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게 꼭 성공하리라는 보장은 없어서, 미안하지만 좀 그렇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주은선 위원

1:47:27

좀 보완적으로 말씀드리면, 양 진영에서 이제 발제를 한 명씩 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주제에 따라서 발제자가 3명이 될 수도 있고, 또 외부에서도 또 오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실현 가능한 쪽으로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저도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박명호 위원장

1:47:46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 민간위원들만 발제하는 건 아니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들보다도 더 많이 알고 있고 더 자세한 정보가 있는 분들을 모셔다가 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윤석명 위원

1:47:57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두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하나는 발제 자료 관련이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논의 과제 주제인데, 아까 민주당 간사이신 오기형 의원님이 저하고 이제 지금 장시간 말씀을 여기서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 말씀 중에 하나가 퇴직연금 관련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자문 위원 중에서 퇴직연금 전공자는, 정창률 우리 위원님 한 분만 계시는데, 아까도 자꾸 이제 노후소득 목적의 국민연금이 적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어찌 됐든 구조개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민주당에서 적극 추진하는 것 중의 하나가 “퇴직연금 강제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 퇴직연금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별로 없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를 좀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게 진정한 의미에서 구조개혁입니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일단은 제가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명확히 하고 싶은 게, 제가 발제문 요약에서 제가 꼭 요구한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윤석명 위원

1:48:51

그 중 하나는, 특위기간이 너무 짧으니까! 최소 6개월을 먼저 연장하자! 이거는 해결된거 같아요.

박명호 위원장

1:48:55

잠깐만요. 저희가 그 안건들을 지금 논의할 예정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 그러니까 첫 번째 요구는 이미 연장하기로 오늘 말씀하셨으니까 해결된 것이고요. 그 다음 요구인 회의 공개와 관련해서. 지금 녹취를 하고 있는데, 녹취록을 기반으로 해서 각 위원들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회의록에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그리고 각 위원들한테 확인하는 작업을 거친 다음에. 그것은 어떠한 식으로든지 공개한다는 전제하에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그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위원들

동의합니다.

박명호 위원장

1:49:48

그러면 많은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사무처 직원분들이 많이 고생을 하겠지만, 요새는 AI가 워낙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녹음을 잘 하고, 그걸 기반으로 AI한테 좀 돌리라고 얘기를 해 주시고 잘 정리하셔가지고 각 위원분들한테 자기가 발언한 내용들에 대해서 확인하는 식으로 한 다음에 회의록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석명 박사님 세 번째 요구사항은 무엇이었나요? 어떤 게 또 있으셨나요?

윤석명 위원

1:50:17

유튜브 생중계입니다. 왜냐하면

박명호 위원장

1:50:19

생중계는 지금 시스템 자체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만약에 저희가 꼭 필요로 하는 거라고 합의가 이루어지면 해보는 건 어떨까 합니다. 근데 매번 회의를 유튜브 생중계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구조여서요. 그건 좀 생각이 필요합니다.

윤석명 위원

1:50:38

모두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세 회의록이 굉장히 중요하기는 한데, 상세 회의록에서 우리가 어떤 컨펌을 받을 때는, 자기 발언에 대해서만 컨펌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회의 내용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꼭 들어가야 될 내용들이, 나중에 보면, 특정인들이 발언한 내용들이 다 빠져있어요! 그런 부분이 잘 컨펌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유튜브 생중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세은 위원

1:51:00

동의하지 않습니다.

윤석명 위원

1:51:02

왜? 동의를 안 하나요?

정세은 위원

회의록 잘 작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윤석명 위원

회의록에서 다 빠져 있다니까요!

정세은 위원

그래서 잘 작성하면 될 거 같습니다.

윤석명 위원

중요한 건 다 빠져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면!

정세은 위원

잘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윤석명 위원

다른 분들 의견 어떠세요?

박종상 위원

1:51:13

하나만, 중계가 어렵다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AI가 하든 어떻게 하든, 처음에

이제 초안이 나온 다음에 이제 각 위원들한테 컨펌을 받을 거잖아요?

그때 고치게 되거나 삭제하게 될 경우에는 그 사실은 모든 위원들한테 수정되는

거는 전달이 되는 걸로 하면, 그러면 좀, 자기가 내가 해놓고는 안 했다고 하고

싶은 거를 뺄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박명호 위원장

1:51:43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말을 하다 보면, 글로 쓰는 것하고는 달리 표현 자체가 되게 어색할 때가 있잖아요. 이제 내용상 큰 지장이 없는 선에서 그런 식으로 수정이 가능한 것이지, 발언 자체를 왜곡을 시키는 것 자체는 자제하는 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원섭 위원

1:52:06

지금 안건을 지금 정하는 건가요?

박명호 위원장

1:52:09

기본적으로 저희가 안건을 정하는 건 아니고요. 이러한 안건들이 안으로 내려왔고, 기본적으로 소화를 저희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에 운영안이라고는 하지만 위원장실에서 준비를 하였고, 양당 간사께서 이것에 대해 특별한 이의를 제기 안 하셨기 때문에, 지금 나눠드린 첫 페이지를 보게 되면 ‘민간자문회의 주요 예상 논의 안건’이라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소화를 해야 할 것 같고 ‘이것 외에 민간위원들께서 오늘 이런 회의를 하는 것처럼 회의 말미에 어떤 제안을 하고, 그러한 제안들이 다뤄볼 가치가 있다고 많은 위원들께서 합의를 해 주신다면, 그러면 그건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오늘같이 이렇게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원섭 위원

1:52:58

추가적인 안건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근데 제가 볼 때 이게 안건 하나에 회의 한 번인가요?

박명호 위원장

1:53:06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원섭 위원

1:53:09

그러면 이제 아까 다른 분들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면, 어떤 안건은 양이 적고, 어떤 것은 양이 크고 하는 것이 좀 있거든요. 예를 들면 기초, 퇴직, 개인연금 개혁을 한번에 다하면, 제가 볼때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퇴직연금을 가지고 한번 하는 것이 사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건을 몇 회에 걸쳐 할 것인지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음에 하는 것인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박명호 위원장

1:53:43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회의를 하고 그 논의를 할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미진하다고 판단이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주제가...

김원섭 위원

1:53:55

근데 발표자가 있는데, 발표자에게 다음주에 하니까 발표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은 한참 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어야 발표자를 선정하고 준비도 하고 할 것 같아요.

주은선 위원

1:54:10

혹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이 주제를 다루면서, 이제 이 주제는 당연히 이제 한 번에 안 끝날 거고 이제 세부 주제들을 이제 다뤄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세부 주제들을 이제 확정하기 전에 어쨌든 우리가 회의를 하면서 이걸로 이제 좀 큰 논의들의 방향들을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그 사이에 이제 세부 주제들을 확정을 해서 이제 발제자들을 쪽 정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박명호 위원장

1:54:39

또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만약에 기초·퇴직·개인연금 개혁을 통한 다층연금체계 구축이라는 주제에 대해 저희가 살펴봤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퇴직연금을 우리가 좀 더 깊숙이 봐. 그러면 별도의 안건으로 퇴직연금을 별도의 주제로 발굴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 될 수 있으니깐요.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요?

주은선 위원

1:54:57

최대 1월까지, 아마 이렇게 진행이, 이 주제로 하면 아마 1월까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그 사이에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그 이후에 발표할...

정해식 위원

1:55:07

저 진행과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지난번 1기 자문회의 때는 줌 회의도 좀 오픈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시니까 굳이 발언을 하시지는 않더라도 다른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는 이렇게 들을 수는 있게, 줌 회의는 기술적으로 가능하면 좀 오픈시켜주는 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드려봅니다.

박명호 위원장

1:55:34

네 가요 가능하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호 위원장

1:55:42

아 네

신동승 선임비서관

1:55:44

예 안녕하세요, 저기 윤영석 위원장실 신동승 선임비서관입니다. 저희도 이제 오늘 오기형 간사님이랑 김미애 간사님께서 이제 연장 말씀 주셔갖고, 저희가 이제 급하게 이제 예산안을 좀 내는 걸 반영시키려고 하거든요. 저희 국회운영위를 통해서 넣고, 그다음에 의장님께 협조를 얻어서... 위원장님께서 이제 평소 말씀하셨던 게, 좀 이렇게 정책보고서 같은 용역보고서를 좀 발주해 갖고, 분과별로 그러니까 주제별로 또는 이제 그거 한 네다섯 개를 말씀해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위원님들 또는 이제

공동위원장님들께서 필요한 예산을 좀 저희한테 말씀을 주시면, 위원장실에서 예산을 많이 챙기겠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회의록은 이제 지금 복지부나 저희 의원실에서 이제 해 갖고 저희가 이제 조사 저기 김태엽 조사관님께 말씀드려 해 갖고 위원장님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호 위원장

1:56:45

그거는 저희가 한 번 고민을 좀 해볼게요. 이게 언제까지 예산 요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신동승 선임비서관

1:56:50

그게 지금 오늘 막 해가지고, 지금 저희 행정실장이 확인 중이신데요.

박명호 위원장

1:56:56

가급적이면 많이 해주세요.

신동승 선임비서관

1:56:57

그럼 맥스로 넣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좋은 의견 있으시면은 또 추가로 주시면,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호 위원장

1:57:09

오늘 저희가 소개를 못 시켜드렸는데, 복지부 과장님이 오셨거든요. 복지부 과장님 잠깐 인사 말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명숙 과장

네 반갑습니다. 저는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 전명숙이라고 합니다.

오늘 논의 많이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야 할 일이 많지만, 많은 분들이 같이 고민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복지부는 필요한 모든 자료를 최대한 충실하게 지원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그 회의록 말씀 잠깐 하셨는데, 회의록은 저희가 작성 지원을 해드릴 수 있지만,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빠졌다는 거나 부족하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확인은 좀 객관적인 행정실에,서 좀 확인하셔서 양쪽에 확인을 받는 방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는 가급적이면 빨리 요청해 주시면 저희가 지원해드리는 데 좀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호 위원장

1:58:07

저희가 그리고 회의가 할 때마다 간단하게 사실 중심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그 브리핑을 하기로 했나요? 아니면 일단 어떤 식으로 저희가 어떤 내용을 다뤘다는 정도는 위원장실에서 보고를 해야 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국민에게 알려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가 객관적으로 어떤 주제에 대해서 누가 그 주제를 발표했다라는 식의 어떤 객관적 사실 중심으로 해가지고 보고하는 거는 매주 매번 할 때마다 할 예정입니다.

그거는 미리 좀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2시간

신동승 선임비서관

1:58:46

저기 자료 관련해서요. 네 지금 복지부 과장님께서 오시긴했는데, 현재 범정부 연금 개혁 지원TF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 금융위, 노동부, 복지부에 다 들어가 있어서 모든 부처에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연금공단에도 할 수 있고 모든 부처에 다 할 수 있으니까, 다 하셔갖고 취합해서 이제 김태엽 조사관님 주시면, 이제 저희가 이제 자료를 충실하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박명호 위원장

1:59:10

가급적이면 2시간 안에 끝내려고 했는데 살짝 넘었는데요. 혹시 위원님들께서 못 한 얘기가 있으시다면 간략하게 말씀해주시지요. 네.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다음 회의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